한중일 저출산 고령화 정책 비교

(저출산・개호・연금)

한국어판

조성호、김도훈、양미선、김새롬、김인환、윤석명
우켄메이、우요、혜 웬지옹、탕 멩준、류 동메이、마 웨이、유안 타오、
시 이、왕 휴이、웨이 지신、장 츠링、장 리、지아 구오핑、장 레이、
류 홍양、헤 단
하야시 레이코、모리이즈미 리에、타케자와 준코、코지마 카츠히사、
사토 이타루、가이 류오얀、나카가와 마사타카、스가 케이타、
사카모토 다이스케、야노 마사에、요코야마 마키、사사이 츠카사

1.한중일 저출산 대책의 구성 요소

① 저출산 대책 프레임 워크

각국에서의 저출산 대책 책정의 법적 근거로는 일본은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 한국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기본정책인 제14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적절한 출산수준을 실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21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균형있는 인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출생정책 최적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저출산 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한국	중국
관련 법률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 (2003 년 성립)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2005년 성립)	✓중화인민공화국 제14차 국가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제 45장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 실시” 제1절 “적절한 출생 수준의 실현 추진 ”
현행 시책 틀	✓제4차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저출산 사회 대책 회의에서 결정 후, 2020년 5월 각의 결정) ✓2020 ~ 2024년도(회계연도: 4월 ~ 이듬해 3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결정) ✓2021 ~ 2024년(회계연도: 1월 ~ 12 월)	✓"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개발을 촉진하기위한 출생정책 최적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에 의한 결정, 2021 년 6 월 26 일) ✓2025 년, 2035년 목표 설정
기타 행동 계획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2003 년~)에 의한 지자체·기업의 행동 계획 ✓시정촌 어린이·육아 지원 사업 계획(보육 서비스·지역의 육아 지원에 관한 계획, 5년마다 작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중앙과 지방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을 개정하고 성의 인구가족계획조례를 지방에서 개정한다 . ✓모유 육아 추진 행동 계획(2021년~2025 년) 의 실시 ✓W LB 지방 계획은 해안 지역의 성 등의 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술

② 고용분야

한중일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을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30대에 움푹 패인 U자형인 반면, 중국은 U자 형태를 띄지 않고, 35-39세의 취업률이 일본과 비슷한 정도이다. 또한, 이 연령계급의 취업률이 가장 높지만, 50세 이상의 취업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

결혼・육아와 함께 계속 고용을 위한 시책은, 남녀공동참가 및 저출산 대책의 큰 기둥이며, 최근 여러가지 법률이 제정되고,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중일 모두 출산전후휴가는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육아휴직제도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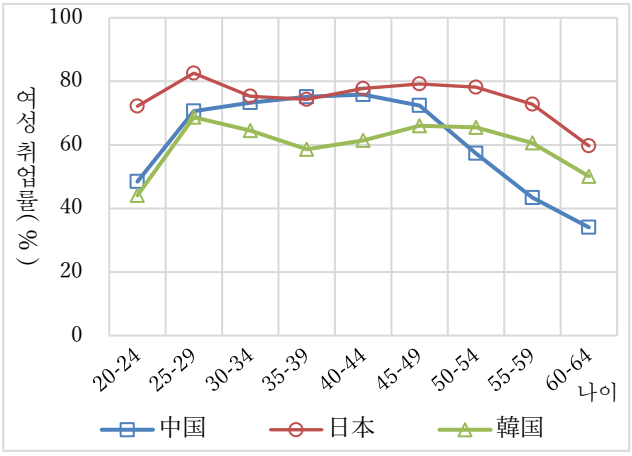

그림 1한중일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

출처: OECD Korea Policy Centre, Family Database in Asia-Pacific, LMF1.4.A.

1. 시책 틀			
	일본	**한국**	**중국**
1 관련 법률 등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여성활약추진법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	✓(근로기준법(1953년~), 남녀고용평등법(1988년~), 고용보험법(2001년~)) ✓2007년 에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장기적 균형 있는 인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출생 정책 최적화에 관한 국무원 결정(2021년 6월 26일)
2 행동 계획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2003~25년)에 의한 지자체·기업의 행동 계획의 책정·공표의 촉진, 인정 제도·차세대 인정 마크(쿠루민 마크 등)의 홍보와 인정 기업의 대처 상황의 공표 촉진, 젊은 여성의 확보, 공공 조달시에 가점 부여 ✓「양립지원의 광장」(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의 대처를 지원하는 정보 사이트)에 행동 계획 공표, 양립 진단 , 기업 대처 사례 등 소개	✓	✓
3 젠더 평등	✓여성 활약 추진법(2015년~)에 의한 기업의 행동 계획의 책정, 정보 공개, 에보시 인정과 입찰 수속 등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부여 ✓이크 보스와 육아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의 양성 ✓성희롱 · 출산 괴롭힘 방지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 육아 · 개호 휴업법) ✓성별 평등에 대해서는 남녀 공동 참가 기본 계획이 주축이 됨.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 ✓기업의 채용·종업원·임금의 남녀별 데이터의 공표·분석 ✓어퍼머티브 액션 추진 ✓여성이 많은 케어 노동 종사자의 보호(가사 서비스 종사자 보호법의 제정, 보육사의 처우 개선) ✓사회 서비스원(사회 복지 시설의 운용을 위해 한국 17시도에 하나씩 설치, 출연기관)의 확대와 직접 채용, 저임금·장시간 노동 개선	✓기관, 기업, 기관의 모집 및 채용 행동을 규제하고 여성의 고용 균등을 촉진함. ✓'여성종업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칙'을 실시하고, 여성종업원의 생식에 관한 권리와 이익의 보호에 관한 특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2 직장 환경			
	일본	**한국**	**중국**
1 근무 시간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의해,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2019년 4월 ~※중소기업은 2020년 4월 ~), 연차 유급 휴가 취득 의무화(2019년 4월 ~) 등이 규정 ✓시간 단위 연간 유급휴가제도 도입 촉진	✓생애주기별 노동 시간 단축(가족 돌봄·본인의 건강·정년퇴직 준비·학업, 노동 시간 단축 지원금) ✓장시간 노동의 완화와 휴식 시간의 확보(주 52시간 제도·휴가 지원 등)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금이 국가에서 중소기업으로 직접 지원금 지급(월 30만원 + 인센티브 10만원)이 주어짐	✓고용주는 직원이 직장과 가정 간의 관계를 양립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법률에 따라 유아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유연한 휴가와 유연한 근무 방법을 협상하고 결정하도록 권장 ✓휴가 및 근무 시간에 대한 현재의 정책과 규칙은 그에 따라 개정되고 개선되어야 함 ✓임신 7개월 이상 1세 미만 의 유아를 모유 수유중인 여성 종업원의 경우, 고용주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을 준비해서는 안 됨
2 정규·비정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동일 기업 내에서의 정규·비정규 노동자의 불합리한 처우 금지, 정규 고용자로의 전환 촉진, 육아휴직 취득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정사원 제도의 도입·보급(지역 한정 정사원 등) ✓다양한 업무 방식 중 하나로 개인사업주·프리랜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정비, 노동자보호정책 검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유연한 고용을 포함한 사회보험 (출산보험 포함)의 가입 촉진

3 텔레워크 환경	✓텔레워크 추진을 명기(「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 등에 근거해 보급 추진)※ 2005-09년의 아이·육아 응원 플랜으로부터 텔레워크 추진을 명기해옴. ✓보조금 있음(인재 확보 등 지원 조성금(텔레워크 코스), 텔레워크 종합 포털 사이트(후생노동성))	✓텔레워크 추진을 명기 (중소기업 기본법) ✓재택근무 상담, 클라우드 바우처, 공동 온라인 회의실 구축(주로 중소기업)	✓원격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4 사회적 분위기의 양성	✓양립 지원 제도의 정착 촉진(육아·개호 휴업법에 근거하는 제도에 대한 홍부 및 계발 등)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라이프 밸런스) 헌장(WLB 필요성 및 사회적 목표 제시, 구체적 행동 계획은 「행동 지침」으로서 책정) ✓기업 경영자 등의 의식 개혁 (WLB 등에 관한 주지 계발, 연수 등) ✓익보스와 육아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의 양성 ✓「육 MEN 프로젝트」사이트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양성 ✓한국의 family friendly 인증이 있지만, 인증을 받더라도 장점이 많지 않으므로, 기업도 의욕적이 않음, 기업이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다지 효과가 없음	✓지원·개호의 시스템 보완. 공모를 통해 , 라이프 케어 , 마음의 위로 ,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가슴이 따뜻해지는 행동」 등을 실시 ✓고가의 예물 등의 낡은 관습 및 습관을 깨고, 결혼과 출산의 새로운 문화 구축 ✓직장 만들기를 추진. 엄마 · 베이비 룸의 설치, 탁아 서비스의 실시 등 ✓주택, 세제, 기타 출생지원책 강화
5 근무시간 중 수유	✓노동기준법 제67조 “육아시간” “ 1 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여성노동자에게 하루 2회,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주어야 한다 ” ✓수유가 상정되고 있지만, 용도에 제한 없음(무급)	✓1953 년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 하루 2회의 수유시간 규정	✓1 세 미만의 유아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 종업원의 경우 , 고용주는 매일 1시간의 모유 수유 시간을 확보해야 함 . →2021-2025년의 제3조(여성의 수유의 권리 보호) 유급, 직장의 위생 등 세세한 규정 있음

3. 출산전후휴가			
	일본	**한국**	**중국**
1 법	✓노동기준법 제 65조 ✓건강보험법(출산수당) → 상병수당과 유사	✓노동기준법 74조 ✓남녀고용평등법 19조 ✓고용보험법 제 70~7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98조 ✓2001년 제도 설계 당시 국민건강보험기금이 적자였기 때문에 고용보험으로 이관한 채 현재까지 이어져 옴	✓사회보험법 제6장 생육보험 ✓각 성여계획생육조례 ✓국무원 「여성 노동자 노동 보호 조례」 제8조
2 대상·요건	✓출산수당 :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임신 4 개월 경과 이후의 출산 · 유산 , 출산전후휴가에 의해 일을 쉬고 있으므로 임금을 받지 않을 것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가입자만 지급	✓취업 중에 임신·출산한 여성
3 기간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8주까지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규정의 기간 이외로 모체의 상황에 의해 분할 취득 가능)	✓국가는 기본적으로 98일간 출산전후휴가를 규정 ✓각 성의 휴가기간을 128~188일로 연장함.

4 수당금	✓출산수당: 표준 보상 일액의 3분의 2	✓통상임금 금액(급여상한은 200 만원이며, 이를 상회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부담)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칙」제8조에 규정 ✓대체율은 100% (산전 산후휴가) ✓지불 기준은 고용주의 직원의 전년도 평균 월급 ✓출산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 ✓생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출산전후휴가 전의 급여액 지급
5 재원	✓협회・조합건강보험/공제조(필요급여) , 국민건강보험(임의)	✓60일: 사업주(우선지원기업에 상한 200만원(현재), 30일: 고용보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0일분(480 만원 한도, 2018년) , 대기업에 대해서는 30일분(160만원한도) 이 고용보험에서 지급	✓생육보험기금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의료보험
6 비정규・자영업자 대응	✓국민건강조합에는 없다(법률요재점검)	✓임금노동자라면 계약의 형태·직종·근속기간을 불문하고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함	✓출산 수당금은 직원 의료 보험에 가입한 부서, 기업 및 개인만을 대상으로 ✓도시부·농촌부 주민의 의료보험은 출산 비용만을 보상하고, 출산 수당금은 포함하지 않음
7 분할	✓분할 불가능 ✓출산전 의무 휴가일수 없음.	✓유사산 경험이 있는 40세 이상인 경우 분할사용 가능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횟수 제한 없음	✓분할 가능, 개인이 선택 가능. ✓산전 15일, 산후 83일
8 아버지 휴업·남성 간호 휴가	✓공무원의 경우,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로서 2-3일 취득 가능(법률이 아닌 인사원 규칙) ✓세키스이홈 등의 선진적인 기업에서는 독자적인 제도가 있음 ✓「아빠 산휴」제도가 2022년 10월부터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시작됨(출산전후 8주간에 2번에 나누어 4주간까지 가능). ✓남편은 분할이 가능하지만, 아내는 분할할 수 없음 ✓아내가 일하지 않아도 남편은 아빠 산휴를 사용할 수 있음	✓남녀 고용 평등법 에서 규정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아버지가 대상 ✓유급으로 10 일간	✓각 성의 '인구여계획생육조례'에 의해 모든 인구를 커버 ✓29개 성에서 남성 간호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며 임금과 복리후생은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 ✓남성 간호휴가는 일반적으로 각지에서 10일에서 30일이며 대부분의 성에서는 보름 이상 ✓출산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남성의 간호 휴가중 의 급여 지급원이나 비용 부담의 구조는 분명하지 않다

4. 육아휴직			
	일본	**한국**	**중국**
1 기본틀	✓육아 개호 휴업법(1991 년~) ✓고용보험법(육아휴업급여 관련) ※2021년에 법률 개정, 올해 4월부터 제도의 공지, 취득 의향의 확인, 1,000명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취득율 공표 의무화	✓남녀 고용 평등법(1988년) 19조 ✓고용보험법 ✓육아휴업 제도 및 급부금 제도: 남녀 고용 평등법 제 19조, 고용 보험법 제70~73조,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95~98조 ※고용감독법: 고용주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잘하고 있는지 기업을 감독함. 2021년에는 900 기업에 대하여 근로감독 실시. 기타 브로셔 등으로 공지. ✓가족 친화적인 기업: 지표로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취득률 등으로 인정하고 저리 융자 가능	✓인구여계획생육법 (조례) ✓조건이 정해진 지역에서 육아 휴가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 ✓여전히 개념적이며, 아직 제도가 없으며, 재원도 미정

2 対象・要件	✓육아휴업의 취득 요건: 아동이 1세 6개월까지 노동 계약 만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022년 4월에 동일한 사업주에 계속해 1년 이상 고용되고 있는 요건 폐지) ✓육아 휴업 급부의 수급 요건: 휴직 전 2년간에 임금 지불 기초 일수(취업 일수)가 11일 이상 있는 완전월이 12개월 이상 있는 것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지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남녀 노동자→기간 내 언제든지 취득 가능 ✓아버지가 취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3세 미만 유아의 육아휴직 취득 가능(일부 지역에서는 6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3 기간	✓출생시 육아휴직(산후아빠 육아휴직) ✓남편은 아이의 출산 후 8 주 이내 (아내의 육아휴직 중)에 최대 4주까지 분할하여 최대 2회까지 취득 가능 ✓원칙적으로 자녀가 1세 까지 (보육원에 입소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최장 2세까지) . 부모 모두 취득한 경우는 1세 2개월까지 휴업 가능 기간이 연장됨(부모 각각 최대 1 년까지) ✓분할하여 최대 2회까지 취득 가능	✓1년(단, 부모 각각 1년) ✓자녀 1인당 '1년 이내'로 부모 모두 같은 아이에 대해 각각 1년 이내의 육아휴업을 취할 수 있지만, 급부금은 동일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수급할 수 없음 ✓임신기간 중부터 육아휴업을 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2017년 12월 정부 발표안) . 법안이 개정되어도 출산휴가 90일은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 휴업 기간 은 육아휴업기간을 맞춰 1년을 넘을 수 없음	✓육아휴가는 각지에서 5 일부터 15일까지
4 급여금	✓육아휴직급여금/수당 ✓180일까지는 휴직 전 임금의 67% , 그 이후 50% . 다만, 육아휴직 중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0 일까지 80% 가까운 임금 보전) ✓법률 제정시에는 임금 보전이 없었지만, 그 후 25%, 50%, 67%로 인상되어 옴. 비율을 올리는 이야기는 최근에는 없음	✓육아휴직소득대체율 향상→통상임금 80 % , 상한이 150만원, 하한이 70만원(단, 75%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후 남은 25% 지급)으로 정해져 있고,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 있음 ✓둘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남편)는 3개월까지 상한월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통칭 「아빠의 달」) ✓1세 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기간에 따라 다름(1개월째 : 20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3+3제도(부모육아휴직제도)로 부부가 동시 및 순차로 취득하는 것을 추진. ✓1번째로 취득하는 부모(3개월): 대체율 80%, 하한 70만원~상한 150만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주 15~30시간): 통상 임금 80%를 기준으로 노동 시간분을 산정, 하한 50만W~상한 150만W ✓육아휴직급여 후불제도 : 육아휴업급여금의 75%는 매월 지급되지만, 급부금의 25%는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한 경우 합산하여 일괄지급됨	✓원칙적으로 휴가기간 중 지급기준은 고용주 직원의 전년도 평균 월급에 따라 계산되고 지급
5 재원	✓고용보험/공제조합	✓고용보험(기금은 감소)	✓육아휴가는 출산보험의 대상외
6 아버지 휴가	✓육아 휴직 취득 촉진, 아빠 휴가나 아빠 엄마 육아휴직 플러스 등의 제도 내용 공지 ✓부모학급 등 강습회 실시 확대 ✓배우자 출산시・출산 후의 유급휴가를 취득하기 쉬운 환경 정비 ✓남성 국가 공무원의 육아에 수반하는 휴가·휴업의 취득 촉진 ✓남성의 가사·육아에 관한 계발 보급·의식 개혁	✓남성 케어 권리 확보 ✓남성의 가사·육아에 관한 계발 보급·의식 개혁	✓1/3 남성이 가사를 부담 . 2/3 는 여성. ✓육아는 여성이 메인. 남성 10% 이하 (시간) 90년대생 40% 는 육아에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

7 비정규·자영업자 대응	✓2022년 4월부터 유기 고용의 휴업 취득 요건 완화(휴업 전 1년간 고용 계속의 요건 삭제) ✓현재 지급 대상외인 고용 보험 미가입의 단시간 노동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정이 향후 논의될 예정(전세대형 사회 보장 구축 회의에서 제언함)	✓비정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의 조건(입직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12개월 이내)을 채우면 취득 가능.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취득 가능 ✓자영업자도 90일 ✓2020 년 10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자영업자는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인센티브가 없었음 . 2 0 18년부터 소상공인에 한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되지 않음
8 관련 지원책	✓복귀 지원, 불이익 취급 방지, 비정규 고용자의 취득 촉진, 대체 인력 고용에 대한 중소기업에의 조성금 등 ✓육아·개호 휴업법 개정에 의해 제도 공지의무화, 분할 취득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부모 모두 육아휴업 취득하는 문화의 정착(3+3 부모육아휴업제)	✓육아 휴가 · 남성 간호 휴가의 분담 제도가 서서히 명확화되고 있음 ✓남성이 가사에 참여하도록 장려

5. 취직·재취업 지원

	일본	한국	중국
1 취직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1985년~)에 의한 평등한 취직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를 방해하지 않는 노동 환경의 정비(커리어 형성 지원, 복직·재취업 지원 등)	✓남녀 고용 평등법, 채용 절차법(2014년~) ✓공정한 채용의 추진(채용 절차의 공정성 강화,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 성차별 익명 신고 시스템 등의 활용) ✓일하는 여성에 대한 노무·심리·커리어 개발 상담 사업→상사로부터의 성희롱 대책, 외부에 상담할 수 있는 장소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계발사업 →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 노동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례」의 실시 (1988년~ 가 아니라 2012년 국무원 여성 노동 보호 특별 규정) ✓1992년 여성권익보호법 ✓2021년 - 2025 년 수유촉진(국가위생위원회 결정) ✓고용주 채용 및 채용 행동을 규제하고 여성의 고용 균등 촉진
2 재취업	✓양육기 여성 등의 재취업 지원(마더즈 헬로워크 등) ✓탁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직업훈련 실시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캐리어 업, 캐리어 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고용 보험의 전문 실천 교육 훈련 급여의 확충(급여율·액, 수급기간 확대) , 리커런트 강좌 증설 등 ✓후생노동성 “일과 육아 컴백 지원 사이트”(직장복귀·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여성을 위한 정보 제공 사이트)	✓경력 중단 여성용 전문 기술 훈련 확대 (의약·바이오·IT 분야 등) ✓새일 센터에서의 취업 지원·취업 후 관리의 통합 추진 ✓경력 중단 여성 취업 촉진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인턴십 지원 (경력단절 여성에게 기회 제공에 지원금) ✓경력단절 여성의 기업 지원	✓출산으로 취업이 중단된 여성에게 재취업훈련 공공서비스 제공. ✓특별한 가족계획을 가진 가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과 보안 시스템의 확립과 개선
3 직업훈련	✓저출산 대책 중에서는 전 노동자에게의 직업 훈련에 대한 언급 없음 (참고 : 여성의 재취업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제11차 직업 능력 개발 기본 계획(2021~2025년도, 후생 노동성)에서, 육아 등과 양립하기 쉬운 직업 훈련 코스 설정, 탁아 지원 서비스, 청년 지원(일본판 듀얼 시스템, 고용방법 훈련, 니트·중퇴자 지원 등) 포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직업훈련 언급 없음 →남녀고용평등법과 워크·라이프·밸런스 기본계획에서 규정 ✓이하는 제4차의 3번째 계획에 기술 ・ 체계적인 학습·훈련·캐리어 패스 설정의 지원과 국가 자격 프레임워크(KQF)와의 제휴 ・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및 평생 학습 추진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 (STEP)의 고도화 및 인프라 확장 ・ 성인식자교육의 확대와 디지털 능력 향상·격차 해소 ・ 평생 학습·직업 훈련 참가 비용의 지원	✓

③ 보육·교육 분야

초등학교 입학 전의 보육·교육은 한중일 모두 후생노동성/보건 분야 시책으로서의 어린이집과 교육 분야 시책으로서의 유치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최근에는 어린이집 서비스가 확대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은 어느 나라도 완전하지 않다. 다만,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가 과제가 될 정도로 충분히 어린이집이 정비되고 있으나, 학교 교육비의 증가는 세 국가의 공통의 과제이다.

1. 보육 서비스·유아 교육			
	일본	**한국**	**중국**
1 법	✓아동·육아 지원법 등 관련 3법 ✓보육원 : 아동복지법 ✓유치원 : 학교 교육법 ✓공인 어린이 정원 : 「취학 전 어린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유치원:유아교육법	✓보육 서비스: 인구 가족 계획법(탁아를 강화한다고 하는 항목 있음) ✓유치원:취학 전 교육법 ✓이전에는 보육제도는 없었지만, 2019년부터 규정 (3세 이하의 아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책정되어, 탁아소의 발전이 논의되고 있음
2 시설수	✓유치원 9,418 (2021년) ✓보육소 23,899(이하, 2022년 4월 1일 시점) ✓인정 어린이원(유보 연계형) 6,475 ✓인정 어린이원(유치원형 등) 1,396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소규모 보육, 가정적 보육, 사업소 내 보육, 거택 방문형 보육) 7,474	✓어린이집:33,246곳(2021년 말 기준) ✓유치원:8,660곳(2021년 말 기준)	✓지역 보육원, 사업주 복지 보육원, 가족 보육원, 유치원 보육원, 기타 보육원 ✓수는 17,800 시설, 보육소수는 131만건 (2022년 9월 현재) ✓무인가 보육소는 정확한 통계가 없고 약 160만의 보육소가 있음 ✓탁아소 설정 기준 : 2021년 말, 2.0 3/1000 명의 보육 서비스 제공 가능 수를 2025 년 에는 4.5 로 하는 것을 목표 ✓시설 이용 상황은 현재 4 0%
3 입소·입장아동수	✓탁아소 1,957,907 명(2 020) ✓지역형 보육 사업소 98,824 명(2 020) ✓보육소형 인정 어린이원 96,007 명(2020) ✓유보 연계형 인정 어린이원 570,421 명(2020) ✓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 570,421 명(2022) ✓유치원 923,089 명(2022)	✓보육소 ; 1,184,716명 (2021년말 기준) ✓유치원 : 582,572명 (2021년말 기준)	✓통계 시스템이 확립되고 있음 ✓2019년 전국조사에서는 5.7 % 가 보육소, 그 후 증가 8-9 % 정도 ✓1 10 만명이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0-2 세의 9%)→출처? ✓베이징은 3세 이하의 6 % 가 탁아소, 10 % 가 가정부, 84 % 는 가족(44 % 는 조부모, 40 % 는 부모:낮)에 의해 보육
4 보육사·보육교사·유치원교사수	✓보육사(등록자수) 1,665,549명(남성 82,330, 여성 1,583,219) ✓보육사(근무자) 382,375명(상근 329,741, 비상근 52,634)(2020) ※등록자의 약 60%는 잠재 보육사 ※근무하고 있는 보육사 중, 유치원 교사 면허 병유자는 약 68 %) ✓유치원 교사 112,230명(본무자 90,140 , 겸무자 22,090)(2021) ※면허 보유자의 약 85%가 보육사 면허 병유 ✓보육교사수 100,058명(2020) ✓문과성·후로성 각각에서, 유치원 교사 면허·보육사 면허만 보유하는 사람을 향해 , 다른 한편의 자격도 취하기 쉽도록 특례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2017년 말까지의 수여 신청분)	✓보육사:236,085명(담임, 연장형, 보조, 대체 보육사 포함) ✓유치원 교사:54,457명(2021년 말 기준)	✓통계 시스템이 확립되고 있음

5 배치 기준	✓탁아소: 0세아 3명에 대해 보육사 1명 1·2세아 6명에 대해 보육사 1명 3세아 20명당 보육사 1명 4·5세아 30명당 보육사 1명 ✓유치원 : 1 학급당 전임교사 1 명 (1 학급의 유아수는 35명 이하가 원칙)	✓어린이집: 0세반 1:3, 1세반 1:5, 2세반 1:7, 3세반 1:15, 4, 5세반 1:20 ✓유치원: 3세 14~20명, 4세 18~25명, 5세 22~28명 (지역교육청별 상이)	
6 각종 시책의 상황	✓육아 안심 플랜에 근거하는 보육의 확대 및 정비 ✓지역의 실정에 따른 보육의 실시(보육 컨시어지, 광역적 보육소 등 이용 사업(순회 송영 버스)의 활용, 소규모 보육·기업 주도형 보육·유치원의 2세아 수용 등에 의한 0~2세아 정원의 확대) ✓사업소 내 보육 시설·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확대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의 착실한 실시 ✓시정촌 어린이·육아 지원 사업 계획에 근거하는 보육 서비스 공급 촉진 ✓유아교육무상화 정책→2019년 10월 개시. 대상은 3～5 세이며 0 - 2 세는 무상화되지 않음 (주민세 비과세 가구는 무상). 인가외 보육소의 보육료도 「보육 인정」을 받으면 보조 대상 (상한액 있음). 본래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신고를 행하고 있어, 나라가 정하는 지도 감독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무상화 대상이지만, 대기 아동 문제에 의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시설의 이용 아동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의 보조는 5 년간의 유예 기간이 설치되었음. 이들 시설은 5년 동안 지도감독 기준을 충족해야 함 ✓0～2세까지 무상화를 펼치는 논의는 없지만, 2023년 1월에 제2자의 0~2세 무상화를 도쿄도가 내세웠기 때문에, 향후, 국가 레벨에서도 대응할지, 논의와 될 수 있음 ✓보육 인재 확보·육성 ✓대기 아동 해소 (지금 보육원을 만들어도 아이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남는다는 위기도 있다) 3～5 세는 개선하고 있지만, 0~2세는 부족함. ✓허가 시설과 허가 외 시설의 비교 : 인가 시설에 입소 희망이 쇄도하고, 특히 도시부에서 대기 아동이 많음 ✓예전에는 3세 이하를 맡기면 귀엽다는 발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머니는 일하는 것,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보통이 됨	✓공립의 보육원·유치원 이용률 확대(50%→60%) ✓보육의 무상화 추진(2012년:0～2세 무상 보육, 5세 누리 과정, 2013년:3~4세로 누리과정 확대 추진) ※ 누리과정이란 보육원 · 유치원의 공통 보육교육과정을 말하는 동시에 보육료 교육비 지원 정책을 말한다 ✓재원은 중앙정부, 시군구. 0 -2 세는 세금, 3 ~5세는 유아교육지원특례법(2017 년 이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모든 가구, 모든 계층을 대상 ✓2012년부터 보육의 무상화가 시작되면서 취업 여부나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소 및 유치원 이용료가 지원되면서 이용률이 높아짐 (2022년: 0세 499,000won, 1세 439,000won, 2세 364,000won, 3~5세 260,000won) ✓보육의 질 관리·평가 제도가 있어, 부모의 신뢰를 얻음 ✓보육 지원 체제 개편(보육소 1일 12시간 운영부터 기본 운영 시간 및 연장 보육 시간 분리 운영) ✓보육사 배치 기준 개선 계획(담당 아동수 감소) ✓보육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보육사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확대 ✓사업소 내 직장 보육소 확대(의무 설치 사업소 공표 및 미이행 시 강제금 부여)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확대 ✓현재는 정원이 남는 상태로 대기 아동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음 (보육소에 따라 0세반 대기 아동 있다) ✓특별한 육아를 위한 세금 없음 ✓지자체가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여 보육에 지출 ✓보육에 관한 세금공제는 없음..	✓보육원·유치원의 입원자수가 증가 ✓공립 보육원·유치원의 건설 촉진 ✓보편적 보육 제도를 개발 및 실시 하고, 장의 건설을 위해 중앙 재정 기금을 투자 ✓중앙 정부는 농촌부의 보육종합 지도 센터 의 건설에 투자하여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훈련, 감독과 지도를 실시 ✓지방정부가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운영 보조금을 교부하고, 고용주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 ✓종합소득세제도를 개정하여 0세부터 3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지출을 공제 대상으로 함 (1,000위안/월 , 2022 년 1월 1일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분적 면제

2. 학교 교육			
	일본	**한국**	**중국**
1 학교 교육의 충실	✓학교 교육 환경의 정비(유아 교육 진흥·질의 향상,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 정비) ✓커뮤니티 스쿨(학교 운영 협의회 제도), 보호자에 대한 교육 상담 대응 ✓왕따 방지 대책 추진(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 등) ✓고등교육에서 임신한 학생에 대한 배려 ✓등교거부·중퇴 대책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제도(수업료 상당액의 조성금(법정 대리 수령), 2014년 개시, 2020년 확충.소득에 의해 단계적으로 감액, 수입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음) ✓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제도(2020년 개시,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그것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의 수업료 감면, 급부형 장학금 지급)	✓초등교육의 혁신 ✓유치원 · 초등학교의 제휴 교육 과정을 시험 운영 ✓항목별 교육 혜택을 교육 활동 지원비에 통합 (교육 관련 비용 지원) ✓고교 입학금·수업료 무상화→소득 제한 없음 ✓고등학교 입학시스템 개선 ✓대학 입시 개혁(학적부축소·자기소개의 폐지, 고교 정보의 블라인드 처리 등) ✓고등학교 학점제 실시(대학과 같은 단위 취득 시스템에)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교육의 디지털화 추진) ✓진로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에서의 고졸 채용 확대 ✓대학 산학 연계 강화	✓초중학교 숙제 감축 ✓의무교육과목 학외연수 감독 강화 ✓초중학교의 가정교육비(숙박비)의 부담을 경감 ✓포괄적인 취학 전 교육 자원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취학 전 교육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
2 방과후 아동 대책	✓신·방과 후 아이 종합 플랜(소1의 벽 및 대기 아동의 해소)	✓학교 케어 운영 시간 연장, 지역 사회 케어(함께 케어 센터, 공동 육아 등) 확대(학교 케어 밤 8시까지 연장) ✓종일 케어 확대	✓방과후 케어 서비스

3. 교육비			
	일본	**한국**	**중국**
1 유치원	✓공립 유치원 223, 647엔 (23 , 000엔) ✓사립 유치원 52 7 , 916 엔 (48,000 엔) (보호자 부담, 연간, 2018 년 , 문부과학성 "아이의 학습비 조사", ()는 학원 등의 보조 학습비)	✓	✓8 144 위안 /년 3-6 세 ✓평균 가정 교육 지출 (취학 전) : 전국 평균은 6,556 위안, 농촌 지역이 3,155 위안, 도시 지역이 8,105 위안 (2017 년 중국 교육 재정 가정 조사)
2 초등학교 (의무교육)	✓공립 3 2 1 , 281 엔 (82,000 엔) ✓사립 1,598,691엔 (348,000 엔) ✓(보호자 부담, 연간, 2018 년 , 문부과학성 "자녀 학습비 조사", ()는 학원 등의 보조 학습비)	✓학원 등의 보조 학습비 : 1인당 394만원 (연간,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9년간 은 의무교육 →교육에 돈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음. 비용 높음. 부담을 줄이는 정책 시행. ✓평균 가정 교육 지출(초등학교) : 전국 평균 6,583위안, 농촌부 2,758위안 , 도시부 8,573 위안(2017년 중국 교육 재정 가정 조사)
3 중학교 (의무교육)	✓공립 488,397엔 (244,000 엔) ✓사립 1,406,433엔 (220,000엔) ✓(보호자 부담, 연간, 2018 년 , 문부과학성 "자녀 학습비 조사", ()는 학원 등의 보조 학습비)	✓공공 교육 지출(lower secondary total expenditure): 1인당 1 3,775 달러 "Education at a glance 2021(OECD)" ✓학원 등의 보조 학습비 : 1인당 470만원 (연간,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평균 가정 교육 지출(중학) : 전국 평균 8,991위안, 농촌부 4,466위안, 도시부 11,000위안 (2017년 중국 교육 재정 가정 조사)
4 고등학교	✓공립 45 7,380 엔 (148,000 엔) ✓사립 969,911엔 (194,000 엔) ✓(보호자 부담, 연간, 2018 년 , 문부과학성 "자녀 학습비 조사", ()는 학원 등의 보조 학습비)	✓공공 교육 지출(upper secondary total expenditure): 1인당 $16,024, "Education at a glance 2021(OECD)" ✓학원 등의 보조 학습비 : 1인당 503만원 (일반고 : 578만원) (연간,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평균 가정 교육 지출 (보통 고등학교) : 전국 평균 16,900 위안, 농촌 지역 12,200 위안 , 도시 지역에서 18,200 위안 (2017 년 중국 교육 재정 가정 조사)

5 대학	✓국립 2,832,800엔 사립 5,745,585 엔 「헤세이 30년도 학생 납부금 조사 결과」「사립 대학 등의 헤세이 30년도 입학자에 관한 학생 납부금 등 조사」「2018년 학교 기본 조사」, 일본 학생 지원 기구 「2018년 학생 생활 조사」) ✓공공 교육 지출 (t ertiary total expenditure) : 1 인당 19,309 달러, "E 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공공 교육 지출 (tertiary total expenditure) : 1 인당 11,290 달러,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4년제 대학: 사립: 752.3만원, 국공립: 419.5만원(수업료), 입학금: 2018년부터 국공립은 폐지, 사립은 58.4%가 폐지(교육부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보조금과 장학금 이용 가능

4.육아의 여러 과제

	일본	한국	중국
1 남성의 가사·육아 참가	✓육아 휴업 취득 촉진, 아빠 휴가나 아빠 엄마 육휴 플러스 등의 제도 내용 주지 ✓부모학급 등 강습회 실시 확대 ✓배우자의 출산시・출산 후의 유급 취득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 ✓남성 국가 공무원의 육아에 수반하는 휴가·휴업의 취득 촉진 ✓남성의 가사·육아에 관한 계발 보급·의식 개혁	✓남성 돌봄 권리 확보 ✓남성의 가사·육아에 관한 계발 보급·의식 개혁	✓1/3 남성이 가사를 부담. 2/3 은 여성. ✓육아는 여성이 메인. 남성의 육아 시간은 10 % 이하 ✓90 년대 출생의 40 % 는 육아에 참가하고 싶다고 함
2 지역의 육아 지원	✓육아 지원 포괄 지원 센터의 정비 ✓지역의 실정에 응한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의 실시 ✓지역 육아 지원 거점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 공공 단체를 지원 ✓지역의 다양한 인재 활용·세대간 교류·지역 활동에의 참가 촉진 ✓결혼·육아에 관한 지방 공공 단체의 대처에 대한 지원(교류 체험 세미나, 남성의 가사 육아 참가 촉진 등) ✓초중학교의 여유 교실·유치원 등의 활용에 의한 지역의 육아 거점 만들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정 육아 지원 사업 실시(장난감이나 도서 대여, 육아 상담, 놀이 체험실 운영) ✓지역 케어의 확충(공동 육아가 가능한 장소를 확대, 케어 커뮤니티 모델 사업을 통해 참가형 케어 문화의 양성) ✓초등학교의 남은 교실을 이용한 보육소, 지역 케어 센터 등의 설치·운영	✓과학적인 육아지도 실시
3 ICT·AI 기술 활용	✓육아 원 스톱 서비스의 추진(마이너포털 활용 등) ✓육아 논스톱 서비스의 추진(취학 전까지의 서비스의 안내와 신청을 일체화한 서비스 구축) ✓ICT를 활용한 육아 지원 서비스(베이비 테크)의 보급 촉진	✓육아종합포털(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childcare.go.kr)운영(가정 양육 수당, 보육·교육비 신청 등) ✓육아 정보 및 지원 등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스마트 탁아 서비스 ✓온라인 과학 육아 지도 활동
4 아이의 권리의 보편적 보장	✓「아이의 권리」라고 하는 테마로 정리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정책으로서 들려지고 있는 아동 학대 대책, 사회적 양호의 추진, 혼자 부모 지원은,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에서 다른 개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8보호 아동・요지원 가정 대책」 참조	✓정책에 「아이의 권리의 보편적 보장」으로서 열거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나 요보호 가정 지원 등 각각의 항목에 기재 ✓신속한 출생 신고의 촉진(아동 복지의 사각지대 완화) ✓재생할 권리 확보 ✓아동 학대 방지·보호 ✓사회적 양호의 충실 ✓법률혼·부계 중심주의 법령을 아이의 권리 보호의 법제로 개선	✓"중국 아동 발전 프로그램 (2021-2030)" ✓건강, 안전, 교육, 복지, 가족, 환경, 법적 보호 등의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5 육아를 위한 생활 환경·교육 환경 만들기	✓육아 가구에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위성 오피스 정비, 빈집 활용, 직주육(職住育) 근접) ✓여성이나 젊은이 등의 이주·정착 추진 ✓대중교통에서 어린이 동반 가족에 대한 배려 ✓육아 배리어 프리 추진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통학로 대책, 우선 주차 스페이스 등) ✓육아 친절한 도시 실현 ✓재해시의 유아 등의 지원 ✓어린이 사고 방지, 교통 안전 교육 추진, 범죄 방지 ✓「식육(食育)」의 보급 ✓체험 활동 추진 ✓아동 공간 만들기 ✓아동의 학습 지원(생활 곤궁 세대의 아동의 지원 포함)	✓아동・학생의 정신적 건강에의 지원(성장기의 행동 특성 검사) ✓아이의 미디어 과잉 사용(스마트 폰 등)의 포괄적인 예방 대책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기반 만들기(건강가정 기본법 개정, 생활·커뮤니티케어 법의 제정 추진 ✓다양한 가족의 육아 지원 강화(가족 센터의 서비스 확대, 혼자 부모 지원 등) ✓세대 통합형 사회로의 전환 ✓전국민을 커버하는 safety net의 강화 ✓중소기업·비정규직·특별고용노동자 등의 보호 ✓아동 친화적인 도시 확대	✓사춘기의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 교육 ✓어린 시절의 건강 지원 ✓어린이의 근시 예방 ✓어린이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유아 모델 도시 만들기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불임 친화적인 모델 사업자 설립
6 다자 가구 지원	✓탁아소 등의 우선 이용 ✓주택정책에 있어서의 배려·우대 ✓육아 지원 여권 사업의 보급·촉진(아동 수당, 취학 지원)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주택 특별공급 제도, 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주택 지원 등) ✓다자녀 가구의 공공 요금(전기, 도시 가스, 지역 난방, 철도 운임 할인, 수목원 등의 이용료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어린이 세액 공제, 국민 연금의 출산 크레딧 등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장학금 제도의 확충 ✓저소득 가정에 학비 지원(셋째 자녀의 수업료는 전액 지원)	✓일회성 보상 ✓육아 수당 월액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우선 순위 지정 ✓주택구매지표 증가 ✓임시 주택 보조금 (위의 조치는 일부 지역의 정책)
7 외국인 어린이 지원	✓「외국인재의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에 있어서 「유아기」, 「학령기」 및 「청장년기」 초기에 있어서의 지원을 명기 ✓시구정촌이 실시하는 「이용자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다국적 언어 대응의 촉진 ✓보육 시설에서의 외국인 유아의 원활한 수용 ✓다국적 언어화에 대응한, 지방 공공단체의 취학 안내를 철저히 하는 것 및 취학 가이드북의 작성·배포 등에 의한 취학 촉진 ✓「외국인 아동의 취학 상황 등 조사」의 지속적인 실시나 학적부 시스템, 주민 기본 대장 시스템을 통한 정보 파악 ✓외국에 연결되어 있는 아동·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정보 검색 사이트 "카스타네트"의 운영 ✓일본어 지도교원 배치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 학생의 수입 상황 등에 관한 조사」의 격년 실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가의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명시적으로 취급되지 않음
8 요보호 아동·요지원 가정 대책	✓한부모 가정 지원 ✓사회적 양호 시책의 확충 ✓장애를 가진 아이 지원·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의 조기 발견 ✓니트・히키코모리 등의 아동・청년 지원 ✓유아 지원 ✓관련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지법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확대 ✓발달 장애아 지원(저소득 세대의 아동의 발달 지원 포함) ✓아동학대 방지·보호 및 권리존중교육 강화 ✓사회적 양호의 충실	✓특별한 자녀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특수교육보증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취학연령의 장애아의 완전한 교육을 촉진하며, 특수교육의 질 향상. ✓아동 학대 방지 및 보호 ✓사회적 케어 강화

【데이터】

● 보육 시설·재원아수의 개황

<일본>

	허가 시설							인가외 시설				시설수, 재원아수 계	아동수 (재원아+ 비재원아)	재원률
	유치원	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	유보 연계형 인정 어린이원	탁아소형 인정 어린이원	지방 재량형 인정 어린이원	탁아소	지역형 보육 사업소	아기 호텔	사업소 내 보육 시설	인가외의 주택 방문형 보육 사업	그 외의 인가외 보육 시설			
시설 수	7,875	1,246	6,093	1,164	82	22,704	6,857	1,255	8,210	5,454	4,159	65,099		
%	12.1%	1.9%	9.4%	1.8%	0.1%	34.9%	10.5%	1.9%	12.6%	8.4%	6.4%	100.0%		
재원아동 수	1,319,792	264,892	1,172,020	159,385	7,577	2,714,744	99,629	19,314	113,688	6,115	104,150	5,981,306	5,514,746	108.5%
%	22.1%	4.4%	19.6%	2.7%	0.1%	45.4%	1.7%	0.3%	1.9%	0.1%	1.7%	100.0%		
0세	-	647	27,094	4,816	172	183,140	33,294	1,567	21,765	1,018	8,670	282,182	831,824	33.9%
1세	-	4,214	86,851	14,754	486	314,152	39,441	3,796	35,814	1,232	18,494	519,234	866,525	59.9%
2세	-	6,725	105,318	17,882	668	347,876	22,843	4,220	28,415	1,172	22,988	558,106	910,005	61.3%
3세	226,400	46,680	181,575	24,047	1,197	355,904	2,442	3,829	13,140	995	19,197	875,406	934,063	93.7%
4-5 세 _	546,696	103,313	385,591	48,943	2,527	756,837	805	5,902	14,554	1,698	34,801	1,901,667	1,972,329	96.4%
(4세)	260,489	50,349	189,475	24,426	1,233	382,010	413	-	-	-	-	-	973,665	-
(5세)	286,207	52,964	196,116	24,517	1,294	374,827	392						998,664	-

참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문부 과학성 「학교 교육 기본 조사」의 유치원(1호 인정)과 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1호, 2호 인정)을 포함한 3, 4, 5세 아동수로부터, 내각부 「인정 어린이원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의 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의 1호·2호 인정의 3, 4, 5세 아동수를 공제한 인원수이다. 문부 과학성 「학교 기본 조사」 2022년 5월 1일 현재 https://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1/kihon/1267995.htm

※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보육소형 인정 어린이 원, 지역 재량형 인정 어린이원에 대해서는, 내각부 "인정 어린이원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2018년 4월 1일 현재)」 https://www8.cao.go.jp/shoushi/kodomoen/pdf/kodomoen_jokyo.pdf

*보육소, 지역형 보육소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 「사회 복지 시설 조사」2020년 9월 30일 현재 https://www.mhlw.go.jp/toukei/list/23-22.html

4월 1일 시점의 연령에 기초한 각 세의 재원아수를 계상하기 위해, 1-5세의 절반을 전의 나이에 더해, 6세아는 5세아 로서 계상

*0세아에 대해서는, 2019년 4월~2019년 9월 태생으로 조사 시점에서 1세의 아이(사회 복지 시설 조사의 1세아수의 절반)와, 2019년 10월~2020년 7월 태생(일반 로 생후 8주부터 입원 가능)에서 조사 시점에서 0세 아동의 합계이다.

*인가 외 시설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 「영화 원년도 인가 외 보육 시설의 현황 정리」2020년 3월 31일 현재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0816821.pdf 인가

외 시설 중 신고 대상 시설의 입소 아동수. 표중의 각 시설의 계는 연령이 불명의 아동은 제외한다.)

*아동수는, 국립 사회 보장·인구 문제 연구소 "인구 통계 자료집"(2020년 총무성 통계국 "국세 조사 결과")

<한국>

연령(세)	미사용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합계
		국가 공립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합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인원수														
0	408,958	16,924	3,300	1,251	36,657	58,751	2,652	86	119,621	-	-	-	-	528,579
1	53,578	50,600	10,259	4,017	94,521	80,327	12,385	433	252,542	-	-	-	-	306,120
2	30,243	65,259	15,313	6,171	131,567	68,293	14,588	723	301,914	-	-	-	-	332,157
3	39,963	50,339	14,972	6,562	103,331	856	13,582	751	190,393	58	32,266	100,933	133,257	363,613
4	44,191	43,182	13,532	6,188	85,844	327	11,236	711	161,020	99	59,736	147,693	207,528	412,739
5	48,703	41,643	12,865	6,115	82,354	260	10,390	736	154,363	107	84,939	156,443	241,489	444,555
구성 비율														
0	77.4%	3.2%	0.6%	0.2%	6.9%	11.1%	0.5%	0.0%	22.6%					100 . 0%
1	17.5%	16.5%	3.4%	1.3%	30.9%	26.2%	4.0%	0.1%	82.5%					100 . 0%
2	9.1%	19.6%	4.6%	1.9%	39.6%	20.6%	4.4%	0.2%	90.9%					100 . 0%
3	11.0%	13.8%	4.1%	1.8%	28.4%	0.2%	3.7%	0.2%	52.4%	0.0%	8.9%	27.8%	36.6%	100 . 0%
4	10.7%	10.5%	3.3%	1.5%	20.8%	0.1%	2.7%	0.2%	39.0%	0.0%	14.5%	35.8%	50.3%	100 . 0%
5	11.0%	9.4%	2.9%	1.4%	18.5%	0.1%	2.3%	0.2%	34.7%	0.0%	19.1%	35.2%	54.3%	100 . 0%

<중국>

연령(세)	유치원에 입원하지 않음 (추정 인원수)	탁아소 (추정 인원수)	유치원 (인원수)	유치원 인원수 (추정 인원수)	(참고) 2020년 인구조사 (사람)
0	약 3500 만 +	약 110 만 +		약 190 만 +	11,988,057 *
1					14,383,791
2			795,998		15,266,778
3			129,74,093		18,418,078
4			15,011,100		17,827,184
5			17,436,928		16,547,271

* 2020년 인구 보사는 11월 1일부. 12개월로 환산하면 14,385,668명 . 2021년에는 1,062만명의 출생.
+ 가계 조사와 보육 서비스의 개요 데이터로부터 추계 · 추정한 것으로, 2021년 말의 값 .

④ 경제지원분야

경제지원에 의해 출산율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는 없고, 또 일본의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으로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아동수당, 아이를 가지는 가정의 소득세 공제 등, 많은 경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경제 지원 분야의 저출산 시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동수당은 일본에서는 1971년,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는 미시행이며, 정책으로서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아이인지, 부양자인지의 차이는 있고, 한중일 모두 시행하고 있지만, 배우자 공제가 있는 것은 일본뿐이다.

청년층의 결혼·육아로 이어지는 경제 지원도 한중일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은 청년층 기업 지원에 대해서 명시적인 시책이 별로 없지만, 한국, 중국은 중점적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

한·중·일에서는 문화적으로 육아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이 크지만, 조부모로부터 손자로의 경제적 지원 촉진 정책은 일본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1.아동 수당			
	일본	**한국**	**중국**
1 법	✓아동 수당법(1971 년)→아이 수당 특별 조치법(2010/11 년)→아동 수당법(어린이·육아 지원법(2012 년) 에서, 아이·육아 지원 급부 2종류 중, 아동 수당 을 「어린이를 위한 현금 급부」로서 자리매김)	✓아동 수당법(2019년), 유아 보육법(수당 부분:2008년) ✓아동 수당 제도 개편의 검토	✓15개 성은 육아 보조금 제도의 설립을 제안 ✓일부 지역(쓰촨성의 도지화, 감숙성의 임택현, 후난성의 창사시 등, 십수소의 지역)에서는, 육아 보조금의 발행을 개시
2 수당액	✓1 5,000 엔/월(3세 미만) ✓1 0,000 엔/월(3세 이상 초등학생 이하) ✓1 5,000 엔/월(3세 이상 초등학생 이하 제3자 이후) ✓10,000 엔 /월(중학생)	✓아동 수당 : 1 00,000 원/월(8세 미만) ✓양육 수당(보육소 이용하지 않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출생 이전):2 00,000원 /월(1세 미만), 15 0,000원/월(1~2세 미만) , 10 0,000 원 /월(2~ 8 세 미만) ✓유아 수당(보육소 이용하지 않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출생아 이후): 3 00,00 0원/월(2 세 미만), 2025년까지 5 00,0 00 원 /월로 인상할 예정	✓RMB 500/사람/달(도지 꽃) ✓3세까지, 제2자는 월액 500위안, 제3자는 월액 1,000위안의 육아 지원(온주용만구) ✓2 명째는 연간 5 천위안, 3 명째는 3 세까지 1 만위안의 육아 보조 (하야시자와, 감숙) ✓일시 보육 보조금 1만 위안(장사, 후난) ✓2만원의 장려금과 매월 500원의 육아 보조금(대흥 안령 지구는 3명째만 보조)
3 재원	✓국가 · 도도부 현 · 시정촌 · 사업주	✓중앙정부·시도· 읍동면	✓지방재정/고용주

2.소득세 공제			
	일본	**한국**	**중국**
1 아이	✓연소부양공제(16 세 미만)는 2011년에 철폐, 부활하지 않았다. ✓16~1 9 세 부양공제는 38만엔 ✓특정 부양 친족 (19~23세) 은 6 3 만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주부 포함) 1 인당 150만원 ✓소득제한 : 일률 1 0 0 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라면 500만원 이하) ✓연령 제한: 부모(60세 이상), 어린이(20세 이하)	✓1개월 1000 위안 (소득세 공제) 1 6/18 세 이하 ✓나이로 결정하지 않음. 교육에 의해 유치원 · 코나카타카대학 · 박사 코스 , 전일제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에 관한 잠정조치의 인쇄 및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 자녀의 전일제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자녀 1명당 월 1,000위안 공제 가능
2 배우자 공제	✓1961 년 부터 도입 1987 년 에 배우자특별공제 ✓1 961 년에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불필요한 친족과는 달리 상호부조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세제조사회 20 00), 부양공제(7만엔) 보다 높은 공제 (9 만엔) 가 설정되었다(이타 2014). 주부의 우대라는 젠더적인 발상보다는 농업·자영업자에 대한 감세에 대해 샐러리맨에게도 감세를 하는 정치적 추구로 확충되었다(풍부 2017) ✓혼인해, 생계를 하나로 하고 있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4 8만엔(급여 수입이 1 03 만엔) 이하일 때의 공제액 :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 900만엔 이하= 38만엔, 900~950 만엔 이하=26만엔, 950~1000만엔 이하=13만엔(국세청) ✓연간 소득이 48만엔을 넘어 도 133만엔 이하이면 배우자 특별공제가 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많아질수록 공제액이 줄어드는 단계적 설정이 되고 있다. (국세청)	✓부양가족으로서 공제	✓없음

3. 청소년 의 경제적 자립 지원			
	일본	한국	중국
1 인재육성·자산형성 지원	✓라이프 이벤트에 근거한 경력 교육의 추진 ✓젊은이의 능력 개발·캐리어 형성 촉진 (잡 카드, 기능 검정 수험료 감면, 캐리어 형성 촉진 조성금 활용 등), 커리어 교육·취업 지원·학습 등의 일관 지원 ✓결혼·육아 자금, 교육 자금 일괄 증여에 관련된 증여세 비과세 제도	✓청소년의 세이프티넷 정책(상담·원조·보호·의료·학업·자립, 퇴학 지원 등) ✓젊은이의 진로 탐색의 지원과 핵심 인재 육성(「미래 핵심 실무 인재(K-Digital Training)」의 요청, 젊은이의 주력 산업 종사자에의 AI 교육, 젊은이 문화·예술 인재 육성 지원과) 한국형 갭 이어 활성화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의 장기 근속 지원, 학생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 의 참가 확대를 통한 국정 운영에 젊은층 참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 국무원 “젊은이의 고용과 기업가 정신”에 관한 특별한 장을 포함한 “중장기의 젊은이 육성 계획(2016-2025)” (2017년 발표)

2 고용	✓청소년의 고용 안정 (짚의 후광, 공적 직업 훈련 등) ✓정규직 전환·대우 개선 ✓청소년 고용 촉진법에 의한 직장 정보의 적극적 제공(고용 미스매치 해소), 헬로워크에서의 구인 불수리(법령 위반 사업소의 연출), 유스에일 인정 제도(청년 채용·육성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인정)	✓청소년 고용 지원(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미취업자에의 취업 지원, 디지털 산업에의 취업 지원)	✓청소년 고용과 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시스템 개선, 적극적인 고용 정책, 기업 지원, 청소년 고용 통계 지표 시스템 개선 ✓청소년 고용 연수 프로그램, 무료 공공 고용 서비스 의 완전 실시, 장기 실업 중인 젊은이의 취업 지원, 취업 지도, 취직 정보, 취업 인턴십,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 ✓청소년의 직업훈련 강화 , 직업훈련 보조금 정책 실시 ✓청소년의 고용권과 이익 보호를 강화한다 . 청소년의 고용과 노동안전권익의 보호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노동안전감독과 법집행, 노동과 인사의 분쟁조정, 중재와 소송, 노동안전감독과 감독을 강화한다. 인재시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채용·고용제도를 표준화하고 공정한 고용환경을 정비한다 . 실업보험, 사회부조, 고용의 제휴 메커니즘을 개선
3 기업지원		✓청소년의 기업 지원	✓젊은 기업가 플랫폼 구축 ,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의식과 기술 향상, 기업 을 위한 제3자 종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금융 서비스, 은행 대출 등 간접적인 자금 조달 방법 최적화

4. 조부모에 의한 육아 지원의 촉진			
	일본	한국	중국
1 주환경	✓3 세대 동거 · 근거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지자체에 의한 보조금 제도	✓서울시에 의한 조부모에 의한 케어 수당(2023년부터 개시)에서는, 3세 미만의 아이를 케어하는 2친등 이내의 친족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원(아이 1명), 45만원(아이 2 명), 60만원(어린이 3명), 그러나 중위소득의 150 % 이하 ✓서울 이외에도 2-3 실시예가 있으며 조부모만 월 20~30만원 ✓세금제도는 특히 없고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중국의 조부모는 3세 이하를 키우는 경우가 많음. ✓2/3의 아이는 조부모가 기르고 있음 (전국적으로). 할머니 및 나이 많은 여성이 많음. 둘째 셋째까지 맡기는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낳지 않는 경향 ✓정책의 경향은 있지만, 가정의 역할을 분명하게, 장려 및 지원. 한층 더 서비스를 제공. 3세대 동거 및 근처에 사는 것 등은 현재 구체적 정책이 없음 ✓94% 이상의 노인이 아이를 돌보고 있음. 정부로부터의 수당은 나오지 않음. 80 세 이상의 수당(1년에 한 번 보조금 지급 , 수백 위안 정도 , 베이징에서는 천 위안 정도, 다만 이것은 보육에 대한 것이 아님) ✓중국은 활기찬 편을 좋아하므로, 유치원이 시끄럽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노인은 없음. 유치원과 노인홈을 근처에 만드는 등
2 결혼·육아 자금	✓일괄 증여에 관련된 증여세 비과세 제도(1,000만엔 까지 비과세, 부모·조부모로부터, 2 023 년 3월 3 1 일까지, 국세청) 결혼식, 불임 치료, 분만 비용, 손자의 의료비, 유치원· 보육원 보육료,		
3 교육 자금	✓일괄 증여에 관련된 증여세 비과세 제도(1,500 만엔 까지 비과세, 국세청) →습득, 학원의 비용도 o k ✓실무: 신탁은행, 상속세 면제 ✓수당이 있는가 : 국가는 없는 대기업에서 손자 행사 등을 위한 손휴가를 하고 있는 곳이 나왔다.		

5 . 아이의 빈곤 대책		
일본	한국	중국
✓아이의 빈곤 대책의 추진(아이의 빈곤에 관한 대강에 근거해 실시)	✓저출산 대책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음 .	✓빈곤 삭감 · 농촌 진흥 전략으로서 , 빈곤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영양 패키지 , 수업료 면제, 고액 의료 구제 등 의 지원

⑤ 보건 분야

여기에서는 임신·출산, 즉 리프로덕티브 헬스에 관한 케어의 제공과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거론했다. 정보제공으로서의 소위 성교육에 대해서는 한중일 모두 학교교육 속에서 명시적인 '성교육'이라는 용어는 피할 수 있으며, '라이프플래닝', '생명의 안전교육', '인구교육 ','문명가정건설' 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정상분만은 병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에서 지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는 것은 일본뿐이며, 또 일본은 무통분만 실시율이 한국, 중국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

1. 여성의 건강· 모자 보건 전반			
	일본	한국	중국
1 프레임 세트	✓모자보건법(2019년 개정) ✓생육 기본법(2018년 성립·공포, 2019년 시행) ✓어린이·육아 지원법(2012년 성립) ✓모체 보호법(1996년에 우생 보호법으로부터 명칭 개정) ✓계발 틀: 건강한 부모와 자식 21(제2차) 2015년~	✓모자 보건법 개정(여성·유아의 건강 보장을 확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기본법 보편적 보장,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중화인민공화국의 모자보건법 ✓중국 여성 육성의 개요(2021년~2030 년) ✓중국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 (2021-2030)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에서의 여성과 어린이의 개발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실시 계획
2 여성 건강 지원 센터 등	✓사춘기부터 갱년기에 이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인 고민에 관한 보건사 등에 의한 상담 지도나, 상담 지도를 실시하는 상담원의 연수를 실시한다 ✓전국 8 6 지자체(2021 년 8월) ✓보건소 등에 부설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제1차~4 차계획은 「인구집단건강」에 「모성건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2021년(2021-2030)에 발표된 제5 차계획에서는 그것을 여성 건강 '으로 확대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에 따른 폭력과 중장년기 여성의 근력운동 실천 등 여성의 생애에 따른 건강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모자 보건 서비스 체제의 구축을 강화한다. 주, 시, 군의 각 레벨에서는, 정부가 후원해, 표준화된 모자 의료 기관을 설립 ✓여성 수명주기 건강 관리 모델을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대상은 사춘기, 출산, 임신, 폐경, 노인 여성 ✓모체관리제도 모자안전 5제도를 통해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확보

2. 성교육, 인구교육			
	일본	한국	중국
1 학교에서의 성교육	✓초등학교 「이과」에서 수정의 구조 ✓중학교 「보건 체육」 ✓고등학교 '보건체육' 피임 ✓성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톱니 고정 규정이 있음. ✓위험 (negative) 이야기가 많음 ✓실제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있음 (갑자기 왜곡된 정보에 노출된다) ✓"자는 아이를 깨우지 마라"는 의식이 있었음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는다. 전 정권 때 포괄적 성교육을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목표로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아 “포괄적”이 빠진 상태로 계획이 발표되었다. 최근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중고교 보건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용어가 삭제됨 ✓친밀성에 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일본과 비슷함. YouTube 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음 ✓Feminism 의 리바운드가 있어, 남성이 잘못해 가해자가 되는 것이 문제시되기도 함 ✓학교 성교육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일각에서 제시되고(주로 진보진영), 부유층에서 사교육을 통해 성교육을 하기도 함	✓생리 위생과에서 인체의 발육, 기관에 대해 교육 ✓의무교육(초중학교)에서는 성교·피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음. ✓N PO 가 개별의 성교육을 실시(고교 이상, 성교·피임도 포함, 성폭력·성희롱)

2 임신·출산의 지식	✓라이프플래닝 지원의 충실 ✓학교교육단계로부터의 임신·출산 등에 관한 의학적·과학적으로 올바른 지식의 교육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의 보급(학교나 보건소 등에서의 건강 교육·전화 상담 등) ✓임신과 가정, 가족의 역할에 관한 교육, 계발 보급 ✓라이프 이벤트에 근거한 경력 교육의 추진 ✓다양한 롤 모델 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57개소), 상설성교육공간을 구축하여 운영, 대상과 연령에 따른 전문적인 성교육 실시, 2022년 교육목표는 2,200천명(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러브플랜" 사이트 운영(피임·월경, 성 매체 감염증, 임신의 유지·종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전화/온라인/대면 상담 제공) ✓보건소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내 구성요소로 성건강증진사업, 학생, 다문화가정,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선별한 커스터마이즈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사업 내용은 성교육과 상담,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홍보 등. 실시는 지자체별로 결정 ✓지자체 이성 커플 매칭 사업(공무원 중심 사업, 일반 시민 참가 사업 등) ✓'포괄적 성교육', 양성평등 기본법 중에는 전 정권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어 성평등이 됨 ✓교육부에서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를 재생산 건강이나 재생산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식건강과 생식권이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비판이 높아짐. reproductive rights(생식 건강)은 의료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뉘앙스.	✓'중국 여성 육성 요강'은 여성의 생식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식기 감염, 성감염, 기타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식을 넓혀 학교 교육의 다양한 단계에서 과학적이고 실천 건강한 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학생의 생식에 관한 건강 지식의 습득을 촉진하고, 자기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여성에게 실시되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도덕, 성적 건강, 성적 안전의 의식을 높이고 피임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제창하고 있음 ✓'중국아동발달대강' 에서는 아동에게 성교육과 성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별 개념 과 도덕적 개념을 확립시켜 남녀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함.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초 교육 시스템과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성교육을 통합. 자녀의 연령과 발달 특성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행 방지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녀의 자기 방어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지도하고 있음 . 학교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촉진하고, 어린이에게 적합한 성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치료를 받는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아이의 건강 보호 핫라인, 미성년 소년 소녀 성 건강 핫라인이 설립되어 어린이 병원에서 소아과 선생님이 응답
3 성범죄 방지	✓생명(생명)의 안전 교육(문과성) : 성범죄·성폭력 대책의 일환으로서 2023년도부터 실시	✓코로나 시기 digital 성 범죄, 성인 남성이 채팅방이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시도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가 증가. 코로나 시기 원격교육으로 인터넷에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 이런 사건이 늘었다고 파악됨. digital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시작	✓
4 생명·가정의 중요성	✓학교·가정·지역의 대처 추진(생명을 존중하는 것, 만남 체험 등, 육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대처의 추진)	✓학교인구교육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가족, 결혼, 출산에 대해 교육함	✓"좋은 가정, 좋은 가정 교육, 아름다운 가정"을 목표로 가정 문명의 건설을 추진하는 데 주력 ✓'사상·정치과목' 가운데 가정의 중요성, 경로, 가정, '문명가정건설'이 포함 ✓2021 년 에 가정교육법 제정
5 여성의 건강 교육	✓사춘기부터 갱년기에 이르는 여성에 대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 교육 사업의 실시(지자체) ✓여성 건강 지원 센터에서의 상담 지도 및 상담원의 연수 실시	✓	✓

3. 청소년 보건			
	일본	**한국**	**중국**
1 개요	✓건강 증진법 및 그 기본 방침 「건강 일본 21」(미성년자의 흡연과 음주의 근절 포함) ✓건강한 부모와 자식 21(미성년자의 흡연·음주, 젊은 임신·성 감염증 이환율, 사춘기나세증 등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항목 포함) ✓학교 보건 안전법(조직적인 보건 지도·관계 기관과의 제휴, 보건 체육과 등을 통한 성에 관한 지식의 지도) ✓학교나 지역에서의 상담 체제의 충실 (문부성: 스쿨 카운셀러, 스쿨 소셜워커, 교직원대상 연수, 후생성: 지역 양육지원 거점 설치, 보건소 및 아동상담소 등에 의료관계자 상담 추진, 성 관련 피어·상담 등의 추진 등) ✓아이・젊은이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이・젊은이 백서」에 시책 상세 설명 있음	✓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 정신 건강에 요주의 청소년 관리 사업(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 상담 등) ✓학교 보건법에 의해 3년에 1회 근골격 및 척수 건강 및 발달, 질병 유무, 구강 검사 등의 인간 도크 실시. 생식건강과 관련된 항목에는 월경 /초경에 대한 질문 이외는 포함되지 않음 ✓학교 보건법 제 9 조, 학생의 보건 관리에서는 신체 발달 및 체력 증진 예방, 성 교육, 전자 기기 의존증 예방, 도박 중독 예방 등에 대한 사항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을 규정 ✓	✓중국 가족 계획 협회에 의한 청소년 건강 프로젝트："성장의 길","커뮤니케이션의 길"
2 HPV 백신	✓2013 년 에 정기접종→부반응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지 ✓2021 년: 추천, 지자체에 의한 캐치업 접종 실시(공비)	✓만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 '가다실 4가' 무료 접종, 최근 만13~17세 여성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업명칭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접종은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남성 청소년에 대한 HPV 접종 및 백신 변경 (가다실 9 가) 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추진되지 않았음 ✓	✓국가 보건 위생위원회에 의해 전국의 15 개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부 도시는 무료로, 일부 도시는 보조금을 받고 실시
3 월경 지원	✓「생리의 빈곤」 대책으로서, 내각부 남녀 공동 참가국에 정보 제공 페이지 (국가나 지자체의 대처 소개)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용 월경용품 구매를 위한 바우처 지급제도(연 15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지자체별 소득·연령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음). 2022 년 실적: 138천명(9~18세 여성) ✓중앙정부가 저소득층에게만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하는 반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가 여성 청소년(11~18세)에 대해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시행 중 ✓서울시의 ' 공공생리 냅킨 ' 사업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리 냅킨을 준비)	✓

4 . 피임·가족계획·낙태			
	일본	한국	중국
1 가족계획 정책 틀	✓예기치 못한 임신 등에의 지원: 제4차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에 「예기치 못한 임신 등에 고민하는 젊은 임산부 등에의 지원」이 명기됨. 여성 건강 지원 센터나 NPO 등에 의한 아웃리치 지원, SNS를 활용한 상담 지원, 젊은 임산부 등 지원 사업, 긴급 일시적인 거처의 확보 지원, 입양·양 부모 정보 공유 등	✓피임, 임신, 출산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러브 플랜) 운영,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음 (상시 채용 상담원, 5명)	✓「인구가족계획법」 제 19조에 있어서 국가는 시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피임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경구 피임약(필)	✓의사의 처방이 필요, 모두 자비로 보험 적용 없음 ✓월경 불순으로 진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	✓1970~ 1980년대까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를 꼽아 피임서비스 보급과 촉진이 실시되었지만, 1990년 중반부터는 보건소의 피임서비스 가 단계적으로 중단 ✓피임 수술, 콘돔은 2005년에 제공 서비스에서 삭제되며, 현재는 난관 수술은 본인 부담으로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음 (Loop, Long-acting reversible contraception 모두 보험 적용 없음) ✓약국에서 경구 피임약 (2,3 세대) 은 구입 가능, 4 세대 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가격은 8,000 ~ 100,000 won 정도로, 약사가 주의 환기를 하지만 의미없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많음	✓3명까지 출산 제한을 완화 ✓가족계획의 포괄적인 지원과 안전성 확보·개선 ✓기초 피임 도구 제공, 피임 수술은 무료 ✓70년대, 전국의 약국에서 무료 제공, 현재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자동·무료 콘돔, 신분증 제시. 약국은 유료·무료 있음
3 긴급 피임약	✓의사의 처방 필요, 자유 진료(비용은 6천엔~2만엔 정도) ✓2019년부터 부인과 진찰에 정신적 부담이 있거나 사후피임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의 진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진료로 처방이 가능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는 아직 불가	✓의사의 처방 필요, 자기 부담 ✓일부 병원에서 임의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았다.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톨릭 등 종교적 이유라고 생각됨 ✓최근 코로나 기간 한정으로 예외적으로 원격 의료 플랫 폼으로 원격 의료 처방이 실시되고 있다(원격 의료 처방＋택배)	✓1998년부터 약국에서 구입 가능
4 낙태	✓모체보호법에 의해 경제적 이유로도 임신 만 22주 미만까지 낙태 가능. 다만 형법낙태죄도 여전히 존재 ✓「지정 의사」만 시술 가능. 자유진료(보험 적용외)로 비용은 일반적으로 10만~15만엔 정도 걸린다. ✓2021년 12월 경구 임신중절약 판매 승인 신청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인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음 ✓일본에서는 인공임신 낙태 시 배우자나 파트너의 서면 동의 요구 ✓낙태 가능 기간은 1953년부터 1976년까지는 임신 8개월 미만 , 1977 년부터 7개월 미만(23주 이하), 1991년부터 22주 미만. 조산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의료가 진보했기 때문에 22 주가 됨	✓1953년에 형법으로 낙태죄가 규정. 1973년에 모자 보건법에 의해 합법화(유전성 질환 · 강간의 경우만). 2019년에 타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 법 개정은 아직이며, 임신 중지에 대한 벌도 없는 상황 ✓내과적 임신 중지 의약품의 국내 승인·허가가 내려지지 않았음 ✓현재 정부는 낙태를 처벌할 근거가 없 없음. 보건복지부가 2021년 1월 의료법상 임의비급부로 시술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산부인과학회에 보냈음 ✓현재 법률은 공백, 법률의 규정은 없음. 모자 보건법 개정안(처리되지 않음)에서는 14주까지 가능, 14-28 주는 요 상담 제안	✓의료보험·생육보험에 적용 ✓피임 수술을 할 때 수술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함 ✓실천하는 출산 적령기 부부는 국가가 정하는 기본적인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항에서 요구되는 자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예산에 포함하거나 사회보험에 의해 보증 ✓수술 후에는 나라가 정하는 휴가가 있다. 임신 4개월 이내 15 일, 4개월 이상 42 일 ✓지정 병원은 무료, 그 이외는 자비 ✓미혼자의 낙태는 자비 ✓14주까지 낙태 가능, 14주 이후에는 합리적인 이유(건강을 해치는, 유전적 이유 등)가 필요하고, 2명 이상의 의사의 증명이 있으면 가능 ✓통상 27주 이후 금지

5. 임신시 케어			
	일본	한국	중국
1 전반 시책	✓ 생육 기본법에 의해 성육 의료를 끊임없이 제공 ✓ 육아 세대 포괄 지원 센터를 통한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이르는 끊임없는 지원 체제의 확보	✓ 건강한 임신·출산을 실현하는 지원(임신전의 건강 관리 서비스,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임산부·유아가 있는 가정에의 간호사등의 방문·상담 사업, 젊은 임산부에의 경제적 지원 등)	✓ 임신 전 우생 건강 진단 ✓ 임신 위험의 스크리닝 및 평가 ✓ 하이리스크 임신 전담 관리: 임신위험요인 스크리닝을 표준화하여 하이리스크 임신을 특정하고, 특히 임신 리스크 등급이 '오렌지색', '빨간색', '보라색'인 경우의 하이리스크 임신을 특별관리하기 위한 집중진료 실시. 상급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관리 책임을 갖고, 집중치료, 개별관리, 프로세스 전체 관리, 모니터링 등 적절한 전원을 통해 '대상자 서치·등록·보고·관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함(모체위급시 및 신생아 케어) ✓ 임산부 사망 개별 보고 ✓ 지자체 담당자와 건강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 및 보고: 임산부 사망자수가 많은 지역은 상위 정부가 지방행정의 책임자 및 보건국의 주임담당자를 면담하여 임산부 사망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도록 지시하고, 보완조치를 제안하고, 보완 보고서 제출
2 모자 건강 수첩	✓ 있음(자치체에 따라서는 별도 「부자 수첩」 등의 명칭으로, 아버지용 수첩도 모자 수첩과 함께 배포.) 정보 사이트 : 이쿠멘 프로젝트 HP 「 부자 수첩 코너 」 ✓ 모자 보건법에 「모자 건강 수첩」 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명칭은 자유. 「부모와 자식 수첩」 으로서 배포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음(오카야마시 등) ✓ 모자보건법 제16조 「제16조 시읍면은, 임신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모자 건강 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 있음(2008년~) ✓ 2011년 다국어 수첩 제작(5종) ✓ 2020년 기준, 8종(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 산부인과 병원과 보건소 등 기관에서 배포하지만 출생등록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음	✓ 임신을 예정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출생 등록 업무를 실시하는 향진(가도) 가족 계획 사무소, 임신전의 우생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서비스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의해 발행 ✓ 임산부는 1차 의료보건기구, 조산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배포 ✓ 아동의 보건의료(예방접종을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는, 아동 건강 수첩의 유무를 확인해, 아직 받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1차 의료 보건 기관 또는 그 외의 관계 기관에서 재발행. ✓ 출생등록제도(출생증명등록)를 바탕으로 한 통계는 있음. 9 9.5% 는 병원에서 출산. 호적 제도는 지연 발생.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 통계국은 스스로의 데이터를 공표. 정부 부서간에 값을 비교 ✓ 임신을 예정하고 있는 여성, 임산부,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수첩을 건네주고, 임신전 우생 건강 진단, 산전 건강 진단, 소아 건강 진단의 때에 휴대 ✓ 모자건강수첩 분기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분기 2주 전에 중국 질병관리예방센터 모자보건센터에 전분기 정보 를 제출. (모자건강수첩의 보급과 이용을 위한 작업계획의 인쇄 및 배포에 관한 국가위생계획위원회 사무국의 통지)

3 임신 등록 제도	✓지자체 보고에 의해 위생 행정 보고로 공표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 임신한 사람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촌장에게 임신의 신고를 해야 한다.」 ✓임신 신고로 수첩을 받을 수 있음	✓임신확인서 및 출생신고제(대체 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지만,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정보 등은 수집되어 있지 않음. ✓임신한 여성이 의료기관을 진찰할 때 사용하는 카드, 혹은 쿠폰, 100만원 바우처 등이 있으며, 사산의 경우도 받음.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분만의료 취약지 20만원 추가) ✓주민등록번호를 위해 출산 후1개월 이내에 신고 ✓2021년 에 아이·행복 카드가 통합	✓모자건강수첩이 임신등록의 역할
4임산부 건강 진단 제도	✓지자지원 있음. 지자체에 따라 지원액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14회 이상 지급(14회 정도의 지급은 2013 년도부터). ✓모자보건법 제13조 “제13조 전조의 건강 진단외, 시정촌은, 필요에 따라서, 임산부 또는 유아 혹은 유아에 대해서, 건강 진단을 실시해, 또는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5년도부터, 아동·육아 지원법 제59 조에 의해, 지역 아동·육아 지원 사업의 하나에 자리매김됨. 시정촌은 추천할 뿐만 아니라 「시정촌 아동·육아 지원 사업 계획」에서 수급 계획을 세워 확실히 임산부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적어도 부모의 한 쪽이 외국인인 아이의 출생 비율 = 2.1%	✓대한 건강 보험 급부 적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시행 , 청소년 120만원 , 바우처는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결혼이민자(중국조선족 여성 이외도 포함됨)의 임신 /출산지원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 및 통·번역 서비스(2022년 예산: 233억원) ✓→베트남 캄보디아도 많음. 6 %	✓모자 건강 관리 서비스 항목(무료): 산전 건강 진단·건강 교육 지도 5회, 산후 건강 진단 1회, 산후 42일 건강 진단 ✓1,000 만명 , 1 % 인지 확실하지 않음
5 여성 노동자 건강 관리	✓임신 중·출산 후 여성 노동자의 모성 건강 관리 지도 사항 연락 카드 의 작성과 그에 따른 근무 시간의 단축 등(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 ✓출산·피임을 보험으로 한다는 논의는 이전부터 몇 번이나 있었음,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로부터의 반발이 강함,	✓모성건강보호를 위해 임신중인 여성과 분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 야간/휴일근무제한, 하루 2회 30분 수유시간 보장, 출산휴가제도 (90 일), 유산·사산휴가제도(임신주수에 따라 30~90 일)	✓사원의 임신·출산·수유에 의한 기본급의 감액이나 노동계약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음 ✓임신 중 여성 직원 부서는 국가가 정한 3 차원 육체 노동 및 임신 중 금기 노동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정상 노동 시간을 초과하여 노동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됩니다. 하지 않는다 . 부서가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노동부하를 경감하거나 다른 노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임신 7개월 이상(7개월 포함)의 여성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야근을 인정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한다. 근무시간 중에 산전 건강진단을 받는 임산부는 근무시간에 카운트한다. (여성노동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6. 불임 치료 지원

일본	한국	중국
✓2022년 4월부터 보험 적용(자기 부담 3할) ✓대상치료법은 타이밍법 , 인공수정 , 체외수정, 현미경 수정, 남성불임수술로 제 3 자의 정자·난자 등을 이용한 치료는 대상외 ✓치료 시작 당시 아내의 연령 43세 미만, 사실혼 부부도 보험 적용되지만 인지 의향 있는 경우에 한함 ✓불임 전문 상담 센터의 정비 ✓불임치료에 관련된 경제적 부담의 경감 ✓불임치료와 일의 양립의 지원(후생성 정보 제공 페이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불임에서 난임이라는 말로 변경(2010년~)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 보험 적용 ✓건강 보급부 제공에 더해, 소득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시행 (신선 배 최대 9회, 동결 배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횟수 증가 경향, 시술마다 지원금 신청 가능)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생식보조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인간에 의한 생식 보조 의료의 적용 계획에 관한 지도 원칙 (2021년판)」 「생식 보조 의료 서비스 기관 및 인원의 관리의 강화에 관한 몇개의 규정」 ✓2022년 2월 베이징시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 배이식 등 16개 항목을 의료보험에 포함했지만 , 4 월 중순 베이징시 의료보험국은 생식보조의료서비스의 의료보험에 의한 지불 정지 .

✓불임 치료 연락 카드의 활용 (치료 중 노동자와 기업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촉진)	✓난임 부부 심리 및 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난임 우울 상담 센터를 의료 기관에 위탁)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의 제도는 과거 법률혼 부부에게만 제공하고 있었지만, 2019년 4월 법률 개정에 의해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게 됨	중국의료보험국에 의한 의료보험의 비용증가로 이어진다는 판단)

7. 출산 케어			
	일본	한국	중국
1 급부내용	✓이상 분만은 건강 보험 적용, 정상 분만은 자유 진료 ✓출산 육아 일시금(42만엔)※2023년도부터 50만엔으로 인상. (재원은 현역 세대의 건강 보험료로부터만 기여하고 있었지만, 금액 인상에 수반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부터도 염출→후기 고령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2024~25년에 단계적으로 인상) ✓출산·육아 응원 교부금(0~2세의 저연령기의 육아 가정에 10만엔을 지급, 밀착형 상담 지원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2023·24년도는 예산화, 그 후 사업 계속을 위한 재원 향후 검토. ※후생성 HP ✓산전 산후 휴업 기간 중의 출산 수당금(월별 지불)・사회 보험료 면제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철분, 엽산지원과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보건소사업) ✓모든 산전진찰과 분만에 건강보험급여 적용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위험이 높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적용 대상은 2015년 3종에서 2019년 7월부터 19종으로) ✓중앙정부가 출산지원금(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2022년부터) → 의료기관의 바우처와는 별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 있음(출산 축하 신생아 보조 지원 사업, 신생아 명부 서비스, 아빠 캠프 등) ✓위기임신전문상담센터, 한국마더세이브센터 ✓임신·육아 종합 포털 온라인 상담, 불임-우울 상담 센터 운영(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 위탁)	✓생육보험, 기초의료보험 ✓생육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산휴중에 출산 전 평균 급여를 밑도지 않는 출산 수당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터 분만의 의료비 + 출산 후 휴가 비용(매월 전년도 평균 급여))
2 인재	✓산과의 확보 등의 출산 환경 확보 ✓조산사 활용 ✓조산사수 3 7,940 명(영화 2년 위생행정 보고 예(취업 의료관계자))※간호사 1,280,911 명 ✓조산소에서의 출생 수 : 4 , 277명(출생 총수의 0.5 %)	✓99.8%의 임산부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분만이 행해진다(조산사는 조산원 개업이 가능하지만, 2021년 조산원에서의 분만은 26.2만건 중 601건이다(0.2%) ✓식민지 시대에는 조산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조산사는 적고, 연간 6 00건의 출산 밖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 ✓산부인과의충족률은 약 85%, 분만이 가능한 기관은 2013년 706곳에서 2021년 487곳으로 급속히 감소	✓「모자 보건 기술 검정 합격증」을 취득하거나, 「모자 보건 기술 검정 합격증」과 기술 구분을 「의사 면허」에 추가한 사람. 3년에 1회 확인되고, 그 확인은 원래의 등록기관에 의해 처리된다 . (모자 보건 특별 기술 업무 허가 및 직원 자격에 관한 행정 조치) ✓조산사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님. , ✓왕: 의료 자원 한계가 있을 때 조산은 도움이 되었음. 고령화. 간호사는 무통 분만을 도움.
3 제왕절개	✓이상·정상 분만 모두 건강 보험으로부터 출산 육아 일시금 지급 ✓21.6%(2020년)	✓모든 분만 방법에 건강 보험 적용 ✓최근 급속히 제왕절개분만율 상승세 ✓(2021년 제왕절개분만율 57.1%) ✓2000년대부터 제왕절개율을 공표. 그 무렵은 30 % 정도였지만 지금은 60%.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음. 의사들은 주로 산모 평균연령이 증가하고('21년 33.4세), 쌍둥이 분만이 많아지고('21년 출생아 중 5.4%), 아이를 하나만 낳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 여성들 본인이 제왕절개 분만을 선호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 보상이 높기 때문에 제왕 절개로 유도하거나 시간 활용이 좋기 때문에 의사는 그 쪽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있음. ✓그러나 제왕절개에 DRG 가 도입됨	✓생육 보험에는 보통 분만과 제왕 절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장소에 따라 다름. ✓실시 비율은 이전에는 높았지만 (병원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제왕절개 비율을 병원 평가 기준으로 했다(20-30 %)

4 무통분만	✓8.6%(2020년)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일본에서는 '배를 아프게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고연령층에서는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음. 그러나 젊은 세대에서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서서히 불식되고 있어 무통분만의 희망자가 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 무통분만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아직 적음	✓39.1%(2015년) ✓2016년부터 건강보험급여. 원래 개인부담금 4000 원으로 인하. ✓10년 전은 위 세대가 가능하면 무통분만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자연스럽다는 사고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음.	✓19.7%(2014년) ✓2016년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마취와 진통 관리'를 평가 포인트에 포함한 제3레벨 및 제2레벨 모자보건병원 평가기준과 실시규칙을 발행하여 효과적, 안전, 및 임신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 하는 분만 진통 은 모자 보건 서비스의 질을 측정 하는 기준 중 하나임. 모자보건서비스기관이 분만관리를 강화하고 얕은 분만과 분만진통기술을 개발하고 분만진통 등 진통치료관리의 규범과 절차를 확립하도록 장려 ✓2018년에는 성도와 일급도시, 경제발전지역의 대산과병원과 모자보건센터는 70% 이상, 병원에 따라서는 90% 이상에 이르기도 하고, 일반병원의 분만진통은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음 . 그들 중 대부분은 약 10 %이며 일부는 아직 분만 진통을 수행하지 않았음 ✓2019년에는 국가보건의료위원회의 900 개 이상의 병원이 무통분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 ✓무통의 방법으로 의료보험 적용.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낮은 출생률은 이와 관련이 있음 ✓모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태아의 건강을 생각하면 여성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 ✓이전에는 마취의가 부족. 현재는 마취 기술도 향상. ✓건보로 무통을 하고 있는 곳도 있음
5 산과의료보상제도	✓2009년 창설. 분연(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 구분)과 관련하여 발병한 심한 뇌성 마비의 아이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보상과 원인 분석·재발 방지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제도. ✓(보상 대상 기준) ✓재태주수 기준: 28주 이상 (2022년부터 32주부터 변경) ✓(걸이) ✓산 1건 마다 분만기관이 부담하는 괘금: 1만2천엔(2022년에 1만6천엔으로부터 변경) ✓보상금 : 간호・개호를 위해서, 준비 일시금 600만엔과 보상 분할금 2,400 만엔(20년×120만엔), 총액 3,000만엔	✓2013년부터 정부가 불가항력으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개시, 이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 보장청구심의를 거쳐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로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 의사단체는 100%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사 출신이 있는 국회의원이 해당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

6 액세스 향상	✓주산기 의료 체제의 정비·구급 반송 수용 태세의 확보	✓2011년부터 산부인과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보조사의 임금과 운영비 등을 지급하여 개원을 도와주는 ' 분만취약지산부인과지원사업' 실시(1년 다음 사업지원금 : 12.5억원). 다만, 이 사업에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그다지 없고 ,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가 아직 63개소 있음 (기초자지단체 226개 2022) . 내과 ✓2011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아웃리치형 산부인과 사업 실시. 버스에 의료기기를 태우고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가 현지로 감.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성 강화(취약지역에 설치·운영 지원, 임산부 재택 의료 모델 사업)	✓임신 및 출산 기간 동안 진단 및 치료 예약을 촉진하고 임신 한 여성이 조산원에 신청 할 때 책임 의사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며, 한 명의 산과 의사 또는 한 산과 의료 팀 이 전원 하지 않고 모든 케어를 제공하도록 격려 . 여성에게는 모든 종류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가 제공 . ✓따뜻하고 쾌적한 분만실 환경을 만들어 산욕을 중심으로 한 인간적인 분만 서비스 제공. (모자 안전 행동 개선 계획(2021년~2025년)) ✓산과의 육성, 대병원에서 낳고 싶다던가, 현(우리나라의 시도) 정도의 수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됨. ✓산부인과, 대도시에서 혼잡은 없으며, 농촌 조산원의 규모가 작아짐.
7 원치 않는 아이에 대한 지원	✓내밀/익명⊠출산 ✓아기 포스트(베이비 박스와 유사) ✓특별 입양	✓연 3,000~4,000여명의 보호 대상 아동(학대, 빈곤, 유기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설 보호 , 가정 위탁 및 입양에 대한 지원 제도 ✓입양 가족 지원 사업(입양 축하금 200만 원, 입양 아동의 양육 수당:월 20만 원, 장애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월 55만원~63만 원, 의료비는 연 260만 원)원 이내 본인 부담금 지원, 입양 숙고 기간에 모자 지원-가정 내 보호 및 산후 조리 등에 대한 보호 지원 비용 지원), 가정 위탁 지원(일시 가정 위탁: 1일 3만원, 위기 아동 가정 보호 1명 100만원, 중장기 보호가정위탁사업의 양육비는 월 30~40만원 등 지원) ✓최근 익명 출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음. 민간 /종교기관에서 '베이비박스' 운영	✓입양법, 사회복리원/가정 수양

8. 산후 케어			
	일본	한국	중국
1 산후의 거주지	✓출산 후 친정으로 돌아오는 습관이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도 늘고 있음. ✓친정으로 돌아와 출산한 비율 50.1%(2017년 조사.국내 16개 시에서의 임산부 앙케이트 조사.3~4개월 아이 건강 진단으로 배포, 유효 회수 수 1,900표(유효 회수율 41.8%)) ※ 2017 년 아동·육아 지원 추진 조사 연구 사업 " 임산부에 대한 멘탈 헬스 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의 제휴 체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2018)(후생노동성 과학연구)	✓많은 여성들이 민간산후 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2021년 실태 조사 이용률은 81.2%, 자비부담 평균 249 만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산후 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 조리비용 지원 ✓정부는 산후 조리원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 실시 (감염, 안전 등) ✓산후 여성이 집에 머무는 습관은 널리 존재함.	✓산후 1개월 이내는 외출하지 않도록, 낳기 전에 친가로 돌아가는 습관은 있었지만, 지금은 줄어들고 있어 산후는 자신의 집 또는 시가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음

2 산후 케어 제공	✓모자 보건법 개정(2021년 시행)에 의해 지자체에 노력 의무 부과 ✓산후 케어 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은 2020년 에 66.5% (1,158 시정촌)(총무성 행정 평가국 “육아 지원에 관한 행정 평가·감시-산전·산후의 지원을 중심으로-결과 보고서”2) 022년 1 월) ✓숙박형의 이용자수는 8, 107 명 으로 연간 출생수의 0.88 % (후생 노동성 「 산후 케어 사업 의 이용자 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보고서 」 ✓자연 분만은 첫 아이로 5~7일, 두 번째 아이 이후는 3~5일 정도. 제왕절개는→ 7-10일 정도	✓산후 의료 이용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제공 ✓자연 분만은 3-4 일 입원, 제왕 절개에서는 5-6일 입원하지만, 포괄 보수 제도 DRG 도입에 의해 입원 기간은 단축 경향	✓모체건강관리서비스 항목(무료) : 산욕의 퇴원 후, 1주일 이내에 산욕부의 자택에 산욕기 방문하여 산욕건강관리 . 산후 감염, 산후 출혈, 자궁 퇴행 불량, 임신 합병증에서 회복되지 않은 사람과 산후 우울증을 가진 여성은 추가 검사,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의료 및 보건 기관으로 이송. ✓통상 출산 후 입원 기간은 3~5일, 제왕 절개는 5~ 1 주

9. 신생아·유아·소아 케어			
	일본	한국	중국
1 신생아 케어	✓「신생아 방문 지도」는, 모자보건법에 정해진 사업으로, 주로 신생아의 발육·영양·생활 환경·질병 예방 등 육아 상 중요한 사항의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생후 28일 이내(친정에 돌아가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보건사나 조산사가 방문하는 사업 (대상은 전 신생아가 아님) ✓「유아 가정 전호 방문 사업」(안녕하세요 아기 방문)은, 아동 복지법, 아이 육아 지원법 으로 정해진 사업으로, 대상은, 생후 4개월까지의 아기가 있는 모든 가정	✓평생 초기 건강 관리 시스템 평가판 사업 : 임산부와 신생아가 있는 집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과 우아 발달 상담 등을 제공(Nurse Home Visit Program, AU, Nurse Family Partnership, US 모델 참조) 2021년 29개소의 보건소 , 2022년 50개소 공모 예정 ✓미숙아 및 선천적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2000년~) ✓선천적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2015년~) ✓보건소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지자체별로 다름)	✓0세~6세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의 기준(무료):퇴원 후 1주일 이내에 의료 스탭이 산후 건강 진단을 실시해 , 출생시의 상황, 예방 접종 상황, 신생아 질병 스크리닝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 에서는 그 상황 등을 확인 ✓생후 28~30일에 신생아는 B형 간염 백신의 2차 주사와 함께 향진 위생원과 사구 위생 복무 중심을 방문 ✓신생아의 섭식, 수면, 배변, 황달 등을 물어 관찰하고, 체중, 신장, 머리 둘레, 체격 검사를 실시해 , 부모에게 섭식, 발육, 질병의 예방 지도
2 유아·소아 케어	✓소아 의료의 충실 ✓마음의 건강 만들기(사춘기 보건 등) ✓예방 접종 추진 ✓소아 만성 특정 질병 대책 등의 충실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 경감을 실시하는 지방 공공 단체에의 지원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자기 부담 경감(미취학아 2할)·소아 의료비 지원(지방 자치체마다) ✓의료 케어 아동 지원	✓양아수당 30만원(1세), 보육 서비스 이용시는 별도의 보육 지원(보육료 바우처, 전액 지원) 아동 수당 10만원(~8세) ✓15세 이하의 아동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경감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sealant)치간 채우기 본인 부담금 경감(30~60%→10 %) ✓6세 미만 어린이 검진 정책(총 8차 검진)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대상 국가 예방 접종 지원 백신의 비용을 전액 지원 ✓건강 여성 초보 클리닉 사업-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가다실 4가) 접종	✓모유 수유를 지원하는 환경 만들기 ✓0~6세아 건강 관리 서비스(무료) ・ 유아의 건강 관리. 보름달 후의 후속 서비스를 향진 위생원이나 사구 위생 복무 중심에서 실시. 원격지에서는 마을 위생실이나 사구 위생 복무 준에서 실시한다. 3, 6 , 8 , 12 , 18 , 24 , 30 , 36 개월 총 8회. 성장발달, 심리·행동발달 평가를 실시해, 과학적· 합리적인 식사, 성장 발달, 질병 예방, 부상의 예방, 구강 케어 등의 건강 지도를 실시 ・ 미취학 아동의 건강 관리. 4세~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 1회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실시. 산재하는 아동의 건강 관리 서비스는, 향진 위생원, 사구 위생 복무 중심으로 제공 하지만, 보육원에서 제공하는 것도 가능. 체격 진찰, 심리·행동 발달 평가, 혈액 검사(또는 헤모글로빈) 검사, 시력 검사를 실시해, 합리적인 식사, 성장과 발달, 병의 예방, 부상의 예방, 구강 케어 등의 보건 지도 실시 .

10. 각종 시책			
	일본	한국	중국
1 다태임산부에 대한 지원	✓제4차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에서 ‘다태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이 처음으로 명기. ✓다태아의 육아 경험자 가족과의 교류회, 상담 지원 ✓육아 서포터 파견 ✓지자체에서 대응 ✓2 01 8년 아이치현 도요타시 미츠코 학대사망 사건이 계기 ✓다태아 출산률: 2.1 % (인구동태통계, 2021년) ✓다태아 출산률은 불임치료의 증가와 함께 상승 경향이 있었지만, 2008년에 일본산과부인과학회에서 배 이식은 1회 1개로 하는 견해가 나타나 일단 감소, 했으나 그 후 다시 증가 경향	✓다태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원금액 인상(1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출산 축하금(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은 출생아별로 지급 ✓다태출생률은 지속 증가중으로 2021년 기준 5.4%(26만 4,000명 중 1만 4000명),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만 1219명(8.1%)	✓<여성노동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조례> ✓다태출산의 경우 출산마다 출산휴가가 15일 연장(출산수당금도 15일 연장). ✓다태출산의 경우 1인 늘어날 때마다 수유시간을 30 분씩 늘림 . ✓한 자녀 정책시에 다태아의 경우는 출산 횟수 1회로서 카운트
2 계속 케어	✓2012 년경부터 추진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끊임없는 지원」이라고 칭해, 그때까지 부족했던 임신기~산후의 시기 지원에 힘을 쏟고 있음	✓출산·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육아 친화적 인 사회 구축 (비용, 시간, 보육)	✓출산 전후의 케어 서비스의 레벨 향상 ✓0~6세아 건강 관리 서비스 규범 (국가 기본 공공 위생 서비스 사업)
3 출산 의욕	✓일본에서도 고소득자가 결혼·출산하기 쉬운 상황은 있음 ✓다양한 저출산 시책은 정규직이 이용하기 쉬운 제도가 되어 안정적인 일·소득이 유리 ✓출생 동향 기본 조사에서는 현재의 소득을 묻고 있으므로, 낳았을 때의 소득은 알 수 없음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출산확률이 높음(관련 연구링크, 2010~2019년 노동패널조사에서 소득 하위층(1분위)의 출산율은 소득 상위층(3분위)의 39.1 ✓%), 건강보험공단 분석에서는 분만여성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고용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여러 조사에서 출산의향은 계속 감소 중이며, 특히 여성에서 낮게 나타나 사회적 관심이 높음	✓고소득자의 자녀수가 많지만, 결혼하고 싶은 의지가 낮지 않다. 전통적으로 자녀가 많으면 행복하다는 의식이 있음. ✓중간층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의 수가 적음
4 남아선호 대책	✓1980년 까지는 남아선호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음 ✓예외는 히노에우마(1906년, 1966년), 다만 전후의 해는 성비가 떨어짐(등록을 나중에 하는 경우 존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서자는 남아 선호(전후는 여아가 많음. ✓역사적으로 입양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짐.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성비가 불균형(1990년: 116.5) ✓입양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음 ✓극심한 성 선택을 위한 낙태로 1987년 의료법을 개정해 태아 성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제하였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재는 고지 가능. 그러나 출생아 성비는 2005년 정도부터 자연 성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남아선호로 인한 입양 가능성은 매우 낮음	✓성 선택적 낙태는 금지. 임신 중에 성별을 전하는 것은 금지, 전하고 나서 인공 낙태도 금지. 그러나 그것을 뚫고 불법 병원에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태도 있음 ✓우선 혈액 샘플(@홍콩·마카오)로 성별을 아는, 그것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 ✓출생시 성비는 2021년에는 108.3으로 떨어졌지만 남부 일부 지역 (광동성) 에서는 여전히 남아가 선호됨 ✓남아 한 명 정도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음
5 간지 대책	✓1966년 병오(히노에우마)의 미신을 불식하도록 홍보 활동	✓정책 대응 없음 ✓아이를 낳을 때 행운이 온다는 해가 있음 . ✓히노에 우마의 인식은 약간 있음. ✓특정한 날짜(좋은 사주인 날짜와 시간을 점술가로부터 돈을 내고 택일받음)에 아이를 낳기 위해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음	✓옛날에는 「양년에 아이를 낳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양은 10명 중 9명이 불완전」이라고 하는 미신이 있어, 양년의 출산을 피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⑥ 주택 분야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주택 시책은 타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종래 일반적인 주택 확보로서 주택 정책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청년이나 결혼시의 지원 등,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억제를 위한 시책이 필요했지만, 세 자녀 정책 도입에

의해 다자녀 가정에는 세컨드 하우스의 구입 제한 완화 등이 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일본	한국	중국
1 청소년 지원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은 부족 ✓그동안 식구가 많은 집, 모기지 공급에 의한 자가 정책이 주가 되어 왔던 관계로 청년 주택 정책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옴 ✓저출산 대책의 한 분야로서 「주택 정책」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고, 향후 청년에 대한 주택 시책(예를 들면 월세 지원 및 저렴하고 양질인 임대 거주자용 주택의 공급 증가 등)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청소년 주택 지원 ✓주택보증금, 임대료 지원 강화	✓
2 결혼시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2016년도~) 신혼 세대(소득 제한, 연령 제한 있음)에 대한 신규 주택 취득 (임대), 이사 비용의 일부 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2020년에 실시한 지자체는 비대도시권을 중심으로 289개(1718 시구정촌의 16.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년~)에 있어서의 ①청년·예비 부부 주거 지원 강화(다양한 청년 주택 공급 확대:2019~), ②학생 부부 주거 여건 개선(청년 임차 세대 주거비 지원 강화:2019~), ③신혼 부부의 주택 준비 자금 지원 강화(신혼 부부 재봉 임대·분양 주택 공급 확대:2019~), ④신혼 부부 재봉 임대(행복) 주택 공급(육아의 좋은 주거 인프라 정비:2019~) ✓신혼부부와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공공주택공급 · 금융지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억제 ✓17개 성청이 발표한 '적극적인 생식지원 대책의 한층 더 충실과 실시에 관한 지도적 의견'에 따라 예금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다자녀 가구 우 . 주택 적립금은 실제 임대료 지출에 따라 인출될 수 있으며, 자녀가 많은 가정이 처음으로 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시는 조건부로 주택 적립금의 대출액을 적절히 증액하는 등의 지원책을 제공 ✓일부 시에서는 둘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컨드 하우스의 구입 제한을 해제. 우시시 양계구의 인재주택구입 신시책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세컨드하우스 구입총액의 3%를 지원한다고 규정(일반적으로 세컨드하우스의 구입제한이 있음) ✓세 자녀의 정책이 발행됨에 따라 이러한 주택 시책은 국가 정책으로 중국 전체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3 육아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우대 ✓대출·세제를 통한 주택 취득 등의 지원(육아 세대) ✓양질의 패밀리용 임대 주택의 공급 촉진(지역 우량 임대 주택 제도, 민간 공급 지원형 임대 주택 제도 등) ✓공적 임대 주택 스톡의 유효 활용 등에 의한 거주 안정 확보(육아 세대 등에 대한 추첨 배율 우대 등) ✓공적 임대 주택과 육아 지원 시설의 일체 정비 등의 추진 ✓직주근접 시책 등의 추진 ✓새로운 주택 안전망 제도의 추진(개정 주택 안전망법에 근거)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에의 양질인 공공 주택의 공급 증가와 우선적 입주, 거주 기간의 확대, 임대 부담 경감·모기지 우대	✓주택도시 농촌개발성은 복수의 아이를 가지는 가족을 위한 공영 임대주택 제공 지원 ✓"절강성의 좋은 교육을 촉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에서는 공유재산권부착 주택담보 조건을 충족한 3명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구매 우선권 부여
4 새집준비	✓신혼부부가 준비 (이전에는 남성 쪽 부모가 준비)	✓남성측: 79.5%, 여성측: 20.4%(「2019년도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최근 3-4년 주택이 높아져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주택 사정은 결혼에 영향을 주고 있음	✓농촌에서는 결혼시 신혼집 준비를 보통 남성이 하지만, 도시부에서는 남녀가 함께하는 경우, 남성이 준비하는 경우, 여성이 준비하는 경우로 다양하며, 서로의 의사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5 자가주택보유율	✓51.5%(20~39세 남녀, 2020년 국세조사)	✓34.8%(20~39세 남녀, 「2022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96%(전연령) ✓70%(80 년대, 90 년대 출생의 지가율, 미국의 2배, HSBC 은행 보고) ✓1990년대 출생은 25세 까지 64.7%가 집 구매 (HSBC 은행보고)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에서는 주택구입이 어려우며, 주택이 결혼의 장애가 되고 있음 ✓청년은 부모로부터의 지원이 있어 자가주택보유율이 높음 ✓65% 부모는 자녀와 살지 않음 ✓90년대부터 모두 개인 소유

⑦ 결혼 지원

한중일 모두 결혼은 출생의 전제 조건이며 줄어든 결혼에 대해 의식면, 금전면, 지자체, 기업, 조직을 통한 만남 기회 제공 등 많은 시책이 강구되고 있다.

	일본	한국	중국
1 시책·상황	✓지방 공공 단체에 의한 결혼 지원(만남 기회 제공, 결혼 상담, 상담자 양성, 신혼 부부의 스타트업 지원 등) ✓이주자 촉진의 측면이 있어서 지방이 더 많은 시책	✓만남주선 등은 중앙 정부에서는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일부 지방 공공 단체에서 시행 ✓지방 공공 단체의 시책 내용이나 금액은 다양 ✓결혼지원은 결혼전과 결혼후에 나뉘며, 결혼전은 주로 주거지원이나 매치파티 , 결혼 후는 주거지원과 결혼축하금을 지급(100만~1,000만원) ✓출산 장려 수당은 지역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출생률이 낮은 곳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그러나 한국 남부(해남)의 지자체가 파격적으로 500만원 의 출산 장려금을 내고, 출산율이 증가했으나 4 - 5 년 후의 추적조사에서는 이전 수급자가 많은 비율로 전출함 . 최근에는 각각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부모급여가 2023년 1월부터 0~1세: 70만원, 1~5세: 30 만원 지급. 2024년 1월부터 0~1세: 100만원, 1~5세: 50 만원 지급 예정.	✓2017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청소년의 결혼 과 사랑'에 관한 특별 장을 포함한 '중장기 청소년 발전 계획 (2016-2025)'을 발표함. 청소년의 결혼, 가족 및 재산 건강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어 청소년 관련 법적 권리가보다 적절하게 보장됨. ✓1. 청소년의 결혼관 , 연애관, 가족관 의 교육과 지도 강화 .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에 사랑과 결혼 교육을 도입하고 감정적인 삶에 대한 존경, 성실성, 책임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결혼과 사랑에 대한 문명적이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확립하도록 인도.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결혼과 사랑의 긍정적인 개념을 넓게 넓히고, 결혼과 사랑의 부정적인 개념에 명확하게 저항하며, 긍정적이고 건전한 여론의 방향성을 형성. 혼인신고나 증명서 발행, 집단결혼식 등 문명 적이고 절약적인 결혼식 에티켓을 제창. 청소년이 올바른 가족 개념을 확립하도록 인도하고, 노인을 존중하고, 젊은이를이 사랑하는 것, 남녀 간의 평등, 부부 간의 조화, 근면하고 절약 가사, 이웃 단합, 우수한 가정 교육 및 가족 전통의 계승 , 육성을 제창하는 가족 문명, 노인을 존중하고, 기르고, 돕는 젊은이의 도덕적 구축을 강화하고, 노인을 존중한다는 전통적인 미덕을 적극적으로 추진 . ✓2. 청년들의 결혼과 교제에 효과적으로 봉사. 미혼 고령자등에의 결혼 활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교류 활동을 지원. 기존의 사회화된 청년의 데이트 정보 플랫폼을 표준화하고, 신뢰성이 높은 청년의 데이트 정보 플랫폼의 그룹을 시작. 혼인서비스 시장은 법률에 따라 시정되며, 혼인신탁이나 혼인사기 등 불법적 인 혼인행위는 엄중히 단속. 노동조합, 공산청년단, 여성연합 등 대중조직과 사회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청년들이 결혼하여 친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보증과 특성에 적합한 편리한 조건을 제공

2 결혼식 비용	✓부담은 부모의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결혼식에 초대받은 경우는 반드시 축하금을 지참(20대에서는 2만~3만엔, 30대 이상에서는 3만엔 정도가 시세) 그러나 홀수가 선호됨 ✓결혼·약혼·결혼식·신혼여행까지의 결혼비용 평균액 371.3만엔, 부모·친족으로부터의 지원 있음 71.9%(지원 있는 경우의 평균액: 162.7만엔)(젝시 결혼 트렌드 조사 2022 추계치) ✓남성으로부터 여성에게 예단비는 100~150만엔이 최다(74.2%, 평균액 98.8만엔), 여성이 남성에게 그 반 정도 금액의 손목시계 등을 예단비 반환으로 준다. 다만, 현재는 예물교환식을 하지 않는 경우 쪽이 많다(예물교환식을 「했다 9.4%」「양가 상견례만 했다 80.2%」)(젝시 결혼 트렌드 조사 2022, 전국 추계치).	✓지자체에 따라 결혼식장 비용 지원 ✓주거 이외의 결혼식 비용(남성: 4,017만원, 여성:3,489만원, '2019년도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결혼에 드는 비용(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여행 모두) 포함)) ✓초대자는 축하금으로서 지참(평균 5만원이지만, 신랑·신부와의 친밀도에 따라 다른 10~20-50만원)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현금은 없으며, 신부가이 남성에게 예단비조로 현금을 지불하고, 일정 금액을 여성에게 다시 반환 ✓남성은 여성에게 브랜드품이나 반지 등의 에물을 준다. 여성에서 남성에게 고급시계 등 제공. ✓반지는 반드시(세계 공통)	✓2021년 4월과 9월에 민정부는 총 32개 국가 결혼 관습 개혁 실험 지역을 결정하고, 결혼과 가족 상담을 실시하며, 간단하고 적당한 결혼식 관습과 예의를 제창하며 문명적으로 수준 높은 결혼 문화를 육성하고, 가정의 좋은 전통을 계승하도록, 청년들에게, 결혼과 사랑,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결혼의 나쁜 습관을 제어함 ✓남성으로부터 여성에게 채례금(彩礼金)으로서 10-20 만 위안, 반지는 당연히, 집·차·액세서리 등을 준다 ✓여성은 예단비조로 가구·가전·이불 등을 구입 ✓결혼은 큰 이벤트로 화려하게 하고 사람을 초대하여 큰 돈을 쓰고 시간도 걸림(1년) ✓결혼식 비용은 30~50만위안 ✓축하금은 1000 ~ 2000위안/인
3 만남의 장소의 제공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지인을 소개하는 사람(중년 및 고령 여성)나 직장 등에서의 조직적인 소개의 습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적어짐 ✓이전에는 결혼에 있어서 중매인을 세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 관습은 없어짐(젝시 결혼 트렌드 조사 2022에 따르면, 중매인을 세운 경우는 1.9%) ✓지자체가 만남주선 파티 등을 기획·실시	✓만남주선 파티나 소개 시스템은 민간 결혼 정보 회사가 주로 실시 ✓가족 관계도 중요. 남성의 여자 형제가 많은 경우 ✓본관이 같기 때문에 헤어지는 예, 해외 달리기의 예가 있다. 예전보다 적어졌지만 아직 있다. 본관이 함께라도 결혼할 수 있게 됐다. 법률로 사촌혼은 금지. ✓중매는 20년전까지는 번성했으나, 지금은 거의 없음. 연애 결혼이 보통	✓결혼 플랫폼: 정부는 없고 민간에 많음. ✓노동조합, 부녀연합회가 파티를 조직. ✓농촌에는 중매인이 있으며, 노인 여성이 직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음. 감사도 받으며, 도시에도 어느 정도 남아 있음
4 ICT·AI 기술 활용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 에 의한 결혼 지원 의 AI 활용 (AI를 이용한 매칭 시스템의 고도화를 포함. 2020년도 11.8억엔, 2021년도 8.2억엔. 중의원 질문, 답변)	✓특별히 없음	✓특별히 없음
5 사회적 분위기의 양성	✓「가족의 날」,「가족의 주간」등을 통한 이해 촉진 ✓임산부 마크, 유모차 마크의 보급 계발 ✓「아동과 가족·청년 응원단 표창」의 실시 ✓아이 시선의 만들기 추진(키즈 디자인의 추진, 키즈 디자인상에 의한 정보 공지) ✓육아 지원 패스포트 사업의 보급·촉진 ✓어린이와의 만남 체험 촉진 ✓이쿠멘(남성이 가사육아, 육아휴직을 취한다)·이쿠보스(관리직의 남성, 동료·부하직원의 개호 부담을 배려하는) 프로젝트	✓「남성의 돌봄권 보장(사회적 인식 확립)」(가족 친화적인 기업 제도를 개선: 남성의 육아 항목의 점수 인상) ✓「남성의 돌봄권 보장(네트워크의 형성)」(사회 캠페인에서 사람들의 출산·양육에 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영상·음악·포스터 등을 활용한 홍보 확산, 지방별로 "100명의 아빠단"(아빠의 선배가 지도) 운영	✓"적령기에 결혼·출산, 남녀 평등, 세대간의 조화 및 책임 분담"이라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추천

6 学校教育	✓中学校「技術·家庭科」에서「家庭分야」가 있어,「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등의 유아의 관찰이나 유아와의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학습지도 요령 2017) ✓「技術・家庭科」는 1992 년부터 남녀 모두 수강 ✓중학교에서 커리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나 학교에서 연계 조정이 되어 있으면, 보육소나 유치원에서의 직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중고등학교에서도「가정과」에 보육 영역의 학습이 정해져 있지만, 가정과는 수험에 관계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가정과에서 열거되고 있는 학습 내용은 모두 제대로는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간단하게 밖에 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고 생각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7 조에 저출산 고령화나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인구교육」을 활성화한다고 규정(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서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학교에서 수업, 국민에게 수업, 대학, 인구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 출생 장려 등을 포함. 커리큘럼은 보건 복지부「인구 교육 학술 학회」등에 위탁하여 작성	✓2022년 교육부는 기존 종합실기 커리큘럼에서 노동을 완전히 분리한 '의무교육 커리큘럼안'을 정식으로 발표하고 '의무교육노동 커리큘럼 기준(2022년판)'을 발행. 노동 커리큘럼 에서는 주로 가사 및 노동생산 기술을 가르침. ✓초중학교에서는 노동과, 작년부터 단독으로 노동에 대해 배움. 중학교 이하에서는 노동·밥을 만드는 등

2. 한중일개호제도의 구성요소

공적 개호보험제도는 일본은 2000 년 , 한국에서는 2008 년 에 개시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지역에서의 시행 단계에 있다.

요소		일본	한국	중국
1 제도개요	법	✓개호보험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관련 국가의 법률 은 노인권익보호법이며 ✓지방에서는 《남통시 기본조추 보보 수시 시검 》《상해시 개호보험 시범사업 방안》 《칭다오시 장기요양보험 운영방안》 등
	지리적 범위	✓전국	✓전국	✓시행사업 15+14 지역(허베이성 승덕시, 길림성 장춘시, 흑룡강성 치치할시, 상하이시, 강소성 남통시 , 소주시, 절강성 닝보시, 안후이성 안경시, 강서성 상양시 , 산동성 청도시, 후베이성 장문시, 광동성 광저우시, 충칭시, 사천성 성도시, 신강병단 제8사 이시카와시; 베이징시 석경산구, 천진시, 산서성 진성시, 내몽골자치구 후후호트시, 랴오닝성반금시, 복건성 복주시, 허난성 개봉시, 호남성 쇼탄시, 광서 치완족 자치구 난닝시, 귀주성 청서남 푸이 족 미아오족 자치주, 운남성 쿤밍시, 산시성 한중시, 감숙성 감남 티베트족 자치주, 신랑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
	제도 운영	✓시정촌이 보험자로서 운영, 중앙정부와 도도부현은 이것을 지원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 보험자)이 운영 1) 보건 복지부: 장기 요양 사업의 관장, 장기 요양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3) 장기 요양 사업소: 장기 요양 급여 제공 4) 지자체: 장기 요양 기본 계획의 상세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 장기 요양 사업소의 설치 및 지정의 권한을 가진다.	✓성시 정부가 운영(민간 위탁도 있을 수 있다)
2 재원	원칙	✓사회 보험 방식	✓사회 보험 방식	✓사회 보험 방식
	세금 재원 보조	✓있음(본인부담을 제외한 개호 비용의 50%=국가 25%, 도도부현 12.5%, 시구정촌 1 2.5%)	✓있음 (장기 요양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 % + 생활보호 수급 권자의 급여 비용 100 % 등)	✓지역에 따라 다름(상해 등 의료보험만 있는 곳이 많다) ✓세금 전용 시험 사업 없음
	보험료 재원 비율	✓본인부담을 제외한 개호비용의 50 %를 부담	✓80%	✓모든 보험료로 조달되는 지역이 많다.

	보험료율	✓1호 보험자는 수입에 따라 결정되어 연금으로부터 천인. 전국 평균 6,014엔/월(최고 9,000 엔 330 0 엔), 2호 보험자는 수입에 따라 결정되며(표준 보수의 1.6 4%, 200 4년 3월부터) , 의료 보험료(노사 절반에 급여의 1 0 %)	✓다음 해의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예측액에 근거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건강보험료(2022 년 에는 급여의 6. 99 %, 노사절반)의 1 2.2 7 % (급여의 0.82 % 상당) ✓지역 가입자는 연금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재산(주거 토지 자동차 등)에 점수를 맞추어 보험료를 계산 ✓최저보험료는 건강보험료 19,500원 (지역·직장 동일, 2022) *12.27% (장기요양보험료) = 2,390원	✓소득에 따른 의료보험료의 일정 비율 등 ✓상하이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종업원 의료 보험 급여 베이스(표준 보수)의 1% 가 종업원 의료 보험 풀 기금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료 로서 분기마다 지급된다 ✓보험료 개인계정(个人账户)을 이용하는 지역도 있다
	자기 부담	✓있음(정률: 원칙 10%, 고소득 고령자는 20%, 30%)	✓있음(정률:거택 15%, 시설 20%, 저소득자에게는 감면 있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시범사업에 의해 기본적으로 있다. 1 5-20% 정도.
	세금 공제	(피보험자) ✓개호보험료는 소득세 공제 대상 (소비세) ✓개호 보험 서비스의 본인 부담은 원칙 소비세 비과세 ✓개호 사업자는 소비세 면세. 단 구매 비용(기재의 구입)에서는 소비세를 구매처에 지불한다 ← 개호 보험 수가로 부담하는 소비세분을 보조) (개호 사업자에의 과세) ✓영리 개호 보험 사업자 : 법인세(세율 23.2%), 고정 자산세(세율 1.4 %) 등이 과세. ✓비영리개호보험사업자(사회복지법인, 공익사단(재단)법인 , 사회의료법인,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법인세는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수익사업에는 과세(개호보험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 세율은 수익사업의 19%,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은 23.2%). 고정자산세는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은 0.3%로 과세) ✓개호보험이 시작되었을 때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의료비 공제(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 공제의 대상이며, 이용자는 이용 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는다) ✓장기요양사업자는 비영리기관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기관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반발이 많다.	✓소득세는 의료비 납부 후 계산되며 특별 공제 항목 없음
3 보험자		✓시구정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본적으로 시행 사업이 전개되는 시(의보국). 보험회사 등 기업에 위탁하는 지역도 있다(상해는 위탁 없음).
4 급여비		✓11조 291 억엔(2021 년 개호 급여비 등 실태 통계) 자기 부담은 들어가 있다	✓11조1146억원(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공단부담 10 조957 원(90.8%、9.2%는 본인 부담))	✓시범 사업이므로 합계할 수 없다.

5 피보험자	대상	✓주민 기본 대장 등록자로 ①6 5 세 이상, ②40~64세의 자 ✓(참고: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도도부현 단위의 광역, 2 02 2년도 월액 6 472 엔)	✓의료보험 가입자의 전 연령(특히 논의는 없었다) + 생활보호 수급권자	✓도시 종업원 의료 보험 가입자는 모두, 도시·농촌 주민 의료 보험 가입자는 일부의 시행 사업으로 대상으로 되는, 60세 이상(정년자는 정년 후 1 5년간 보험료를 지불 하는 연금 는 종신). 15년 이후에는 보험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자기 부담은 있지만, 의료를 받을 수 있다.
	수	✓①3 5,788,355 명, ②4 1,900,000 명(2020 년 개호보험 사업 상황 보고)	✓52,929천명(2021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 1) 건강보험: 51,412천명 2) 생활보호 등: 1,517천명 * 65세 이상 인구: 8,913천명	✓전국 49개 도시에서 1.45억명(산동성 2022년 5월 3516.7만명)
	보험료 부담	✓①피보험자만(수입에 따른 보험료) ✓②조합·협회·공제건강보험은 피보험자와 사업주로 1/2씩 부담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치체별·수입별로 보험료가 산정. 표준은 9 단계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더 많은 단계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에현 이가시는 11단계의 개호보험료를 설정하고 있다(2021~2023년도). 또한 최고는 25단계(후쿠오카현 개호보험 광역 연합).	✓전액(지역 가입자) 혹은 가입자와 사업주로 1/2씩(직장 가입자)	✓의료비, 개인, 세금, 사업주 다양한 조합
	징수 방법	✓①연금에서 날인, ②의료보험료와 일체징수	✓건강보험료에 일체징수	✓의료 보험 개인 계정의 날인이 메인
6 수급자	대상	✓요개호(요지원)의 인정을 받은 자로 ②는 그 상태가 특정 질병(말기 암이나 관절 류마티스 등의 노화에 의한 병이 원인의 것)에 의해 생겼을 경우	✓가입자로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64세 미만)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60세 이상의 요양필요(지원필요)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중증이 메인
	수	✓6,381,700 명(2021 년 개호 급여비 등 실태통계) ✓6 5 세 이상 인구(36,213 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8%	✓공인자 953,511명 ✓수급자 899,113명 (2021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통계) ✓6 5 세 이상 인구(8,913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0%	✓누적 172만명(모든 시범사업의 지금까지의 누계)
7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시설, 통소(데이 서비스・쇼트스테이), 거택	✓시설(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거택(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단기(데이 서비스, 쇼트스테이),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그 외 재가급여(복지 용구)) ※주야간 등은 재가급여에 포함	✓대부분의 시행 사업은 시설 지향, 소주시는 재택 지향이지만 선택 가능
	기타 서비스	✓복지 용구, 주택 개수, 이송	✓복지 용구(재가급여), 주택 개보수·이송(지자체)	✓일부 지역에서 복지 도구
	이용한도 설정 유무 프레임	✓요개호도별로 있음	✓장기요양등급별로 있음(재가급여에 해당하며,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범 사업

	개호 체계 보상	✓있음(개호 수가 개정, 3년마다)	✓있음 (수가는 보건 복지부의 장기 요양 위원회에 의해 매년 개정된다)	✓가격은 시설에서 결정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시의 보조액은 시가 결정한다. 시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많아서 1/3 정도
8 서비스 사업자	조직 형태	✓공영 및 민영(비영리, 영리) 조직	✓공영 및 민영(비영리, 영리) 조직 ✓공공(지자체 및 보험자의 직영), 법인(비영리, 주식회사), 개인	✓ 공영 및 민영(비영리, 영리)의 모든 형태가 있음
	공공인정제도	✓있음(지정 사업자의 조직이나 법인)	✓있음(지정 사업자의 조직이나 법인) ✓보험자가 직접 모든 장기요양사업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한다.	✓있음(지정 사업자의 조직이나 법인)
	사업자 선택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음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음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음
9 개호 종사자	자격명칭	✓개호 복지사, 인정 개호 복지사, 실무자 연수 수료자, 구 개호 직원 기초 연수 과정 수료자, 구 홈 헬퍼 1급 연수 과정 수료자, 초임자 연수 수료자, 사회 복지사, 정신 보건 복지사, 사회 복지 주사, 복지 용구 전문 상담원, 의사・치과 의사, 약제사, 보건사, 간호사・준간호사, 관리 영양사・영양사, 치과 위생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언어 청각사, 유도 정복사 , 안마 마사지 지압사, 정신 보건 복지사 등	✓사회 복지사, 의사 (계약 의사 * 포함),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계약의란 노인요양시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국가 차원의 자격 인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기타 직종	✓간호 조무사, 기타 개호 직원, 기타 방문 개호원 등 ✓동반자는 금지	✓비자격자 없음 ✓간병인은 요양병원에 많다. 요양병원협회로부터 간병인에 대한 급여를 해달라는 의견이 강하다. 의료보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	✓장기요양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직원'으로 집계되고 그 중에는 간호사, 조리사가 포함됨
	수	✓2,186,536 명(2015 년 개호 서비스 시설·사업소 조사), 2,050,050 명 (2015 년 국세조사)(하야시 2019a)	✓565,281명(2021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	✓사구양로서비스시설의 2021년 말 직원수는 704,135명, 양로시설에서는 549,391명(민정통계연감)
	외국인 종사자	✓11,584명(2015 년), 재류자격은 특정활동(EPA) , 개호, 기술실습, 특정기능, (특별)영주자,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하야시2019b)	✓간병인(중국조선족)은 관련 통계가 없다(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파악한 적이 있지만 비공식적이고 정확하지 않다). 간병인의 비용은 본인부담.	✓거의 없음

10 비공식 간병인	형태별종사자수	✓「 가정부(남편) 가사 도움 」으로 개호 분야 산업 종사자 없음(2015 년 국세 조사)	✓거주자의 돌봄종사자에 관한 관련 통계는 없다. 거주자의 돌봄종사자는 장기 요양 급여의 비급여이며, 이용자는 일반적으로는 부유층. 별로 없다. 드라마만.	✓양로간호의 가정복무 종사자는 4 1 4 만명(중국가정복 규행 병주 전전고 2017 , 상리부 복복贸贸易和商贸服务业司), 어린이를 돌보고 있다.
	플랫폼형	✓없음	✓인터넷에 의한 가사 도움 파견 서비스는 있지만 돌봄분야 산업 종사자에 관한 공식적 자료는 없다 ✓잔일(음식물쓰레기, 편의점에서 쇼핑 등)은 있지만 돌봄은 없다. b a by sitter 도 별로 없다.	✓아간래료, e가수, 코바 관가 등에 의한 인터넷 가사 돕는 파견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다. 거주보다 파트타임.
11 가족 간병인	가족개호의무에관한법률	✓민법 제 877 조: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 등 (3 월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법 제 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의무가 있다. ✓연금을 은밀하게 받아 체포되는 사건은 있다.	✓노년인권익보장법 제14조:부양 의무자 는 고령자의 경제적부양, 생활부조, 정신적 위안의 의무를 이행하여 고령자의 특별한 필요를 돌봐야 한다. ✓시체 유기로 체포되는 일은 없다. 연금을 계속 받는 사건은 카드와 얼굴 사진 등록 등에 의해 기술적으로 어려워졌다 ✓
	현금혜택	✓현금 급여는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산간부 등에 거주 등의 조건부로, 가족 요양비를 장기요양 고령자에게 지급. 자산조사 없음 ✓가족요양비 수급자수는 2018년 에 1,087 명 으로 적다(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미나미도리시, 안경시에서 가족 돌봄자에게 수당이 나온다
	공공지원	✓개호 휴가·휴업 제도, 개호 상담(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임의 사업)	✓가족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사업소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 사인계약에 의해 관리되며 봉급이 지급된다. 지자체·공단에 장기요양 상담센터가 있다. 돌봄 휴가는 모델 사업(지자체가 급여, 서울시 강남구 등 부유자치단체)	✓시범사업이 있어 장기요양휴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	✓지자체의 임의 사업. 개호종사자 요리 교실 등도 있다.	✓지사의 특별 사업으로서 가족 돌봄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수 있음
	수	✓6,534,000 명 (2021 년 사회 생활 기본조사)	✓75,269명(2018)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가족이 메인이므로 많다.
	시간	✓평균 3 7 분/일(남성 종사자 2 8 분, 여성 종사자 4 2 분, 2021 년 사회 생활 기본 조사)	✓별도로 관련 통계를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파악했지만 비공식적이고 정확하지 않음)	✓전국시간이용조사(가장 최근은 2018년에 실시)에서는 해당 시간은 공표되지 않음

12 요간호 인정	인증 기준	✓심신 상태의 상실도(수형도 모델)	✓심신 상태의 상실도(수형도 모델)	✓시범사업에 따라 다르고, 요양요구 인정, 장애도 인정, 생활 활동 능력 인정 등이라고 불리며, 미나미도리시, 승덕시에서는 요양필요도가 없다
	실시자	✓개호 인정 심사회를 보험자에게 두십시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법적으로는 지자체에 설치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자인 공단의 지사에서 운영.	
	요개호 상태의 계속	✓실제로 요 개호 상태에있는 것	✓실제로 요양필요상태에있는 것	
	등급	✓7단계(요지원 1,2~요개호 1~5), 경도에서 중증까지	✓6단계(인지지원등급, 5등급～1등급), 비교적 중간도에서 중증까지.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노인성 질병에 한함) 환자로 요양필요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유효기간(갱신)	✓있음(6개월, 원칙)	✓있음(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갱신 신청의 경우))	
13 케어 매니지먼트・케어 플랜	케어 매니지먼트	✓있음(케어 플랜 작성)	✓있음(공단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공) ✓계획서에 작성된 급여 종류의 범위 내에서만 급여계약 및 이용이 가능 ✓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한 후 급여를 이용	✓상하이시는 양로 고문 도입, 장기요양보험 제도에는 없음
	케어플랜 작성자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케어 매니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보험자, 급여 제공 계획서는 장기요양사업자	

	ケアプラン法的拘束力	✓ 예	✓ 있음(계획서에 작성된 급여 종류의 범위 내에서만 급여 계약 및 이용이 가능) ✓ 그러나,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계획서 등을 기초로 장기요양 사업소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만드는 것에 대해 평가 점수가 다르다 ✓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부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 수급자의 상태에 따른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는 급여 제공 계획 항목별 평가(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정서지원, 건강관리·간호처치, 기능회복훈련별) ✓ 2) 고령자의 요구나 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지 평가(반영/미반영) ✓3) 급여 제공 계획 후 신체 상태의 변화가 발생했는지 확인(상태 변화/기능 유지 ✓ 4)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의 재작성 필요여부(30일 이내 재작성/불필요(급여계획 유지)	
14 기타 관련 사항	의료와의협력	✓ 예 (적극적으로 추진), 서비스에 따라 의료 보험 급여의 경우도 있습니다	✓ 의료·요양·돌봄 등의 통합 판정 체제 를 도입 예정(2023년 시범사업 2025년 도입 예정. 요양병원(의료보험)-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보험)-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자체)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하는 것)	✓ 의양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 광저우에서는 월 1000위안의 의료급여 가 가능, 칭다오에서는 의료와 장기요양의 통합을 도모한다
	지역밀착	✓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의료, 개호, 복지 등의 연계)	✓ 커뮤니티 케어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2025년 전국 시행은 크게 재검토될 예정)	✓ 모색 중
	간호의질평가	✓ 복수의 평가 방법(제3자 평가, 자기평가, 정보 공개 등)	✓ 보험자의 기준에 의한 평가 제도(인센티브 포함)	✓ 없음

	ICT 활용	✓ICT 기기, 개호 소프트웨어 도입의 추진(지역 의료 개호 종합 확보 기금에 의한 보조 사업 등) ✓개호 사업소에서의 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 사양의 책정 ✓지켜보는 기기등의 도입을 실시한 개호 사업소에 야간 인원 배치의 기준의 완화, 정보통신 기기의 활용한 복약 지도에 대한 개호 수가 신설(2018년) ✓개호 로봇 개발, 이용 촉진(예: 개호 로봇의 개발·실증·보급의 플랫폼 사업(개호 로봇 도입 등에 관한 상담, 정보 발신, 시용의 사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조건 있음)으로 한 대출 사업(독립 행정법인 복지 의료 기구에 의한 무담보 융자 등), 세제 지원(고정 자산세의 특례 등) ✓정보 시스템 → 할 수 없다. ✓개호 청구서와 의료 청구서의 연계는 LIFE 과학적 개호 정보 시스템: ✓케어 플랜 데이터 연계 시스템 ✓사업자 간의 데이터 연계(클라우드 경유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에 의한 정보연계 1) 노인장기 요양 보험 판정자 조회 - 장기 요양 인정자(1~5등급자, 인지 지원 등급) 및 등급 제외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통하여 연계 - 지자체의 담당자는 시스템에 따라 등급인정자·제외자의 정보조회 2) 등급 제외자의 서비스 제공 관리 - 장기 요양 인정자가 아닌 등급 제외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단과 즉시 공유 *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국민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망을 통합하여 운영 일부 시민단체는 개인정보의 관계로 반대. 보험자의 업무에 관한 시스템도 있다 시스템이 중단되었을 수 있음	✓가정병상, 긴급벨 등 ✓스마트 양로시행사업
	종사자의안전 대책	✓노동 재해 방지(사회 복지 시설에 있어서의 안전 관리 매뉴얼의 책정) ✓개호 현장에서의 괴롭힘 방지(후로성에서 사업소에의 통지) ✓개호 종사자에게의 정신건강 대책, 이용자나 가족으로부터의 폭력·폭언 대책	✓2019년 장기 요양사업소의 안전관리 매뉴얼(화재, 감염증, 옴/머릿니 ,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고령자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신고의무자 포함) 등)을 대폭 개정 및 실시 ✓ 고농도 미세먼지 안전관리 ✓ 겨울 돌봄사업소의 안전관리 ✓ 홈헬퍼 인권보호 ✓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요양사업소 방역관리	✓특별히 없음

3. 한중일연금제도의 구성요소

일본에서는 1961 년、한국에서는 1999년、중국에서는 2012년에 국민 여러 연금 체제가 정비됐다.

요소		일본	한국	중국
1 제도틀	제도 성립 추이	✓1 870-90 육군·해군·관고 은급제도 ✓1942 노동자 연금 → 1944 후생 연금 ✓1954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 ✓1961 국민연금 ※공적 연금 제도의 연혁	✓국민연금(1988년 10명 이상 사업장 대상, 1999년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특수직역연금 ✓1960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도입 ✓1963년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 분리 ✓1975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도입 ✓2008년 기초 노령연금(65세 이상 노인 70%에 급여 지급) ✓2014년7월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도입(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도입되었지만, 기초 연금 도입에 의해 폐지)	✓1951년: 기업직공(일반 고용 노동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보험 제도를 설립하고(『노동 보험 조례』) 그 안에 연금 제도가 포함됨 ✓1950 년대 : 공무원 및 사업단위(공적기관) 정규직원용의 공적직원 연금보험 제도 설립 ✓1997년: 기업직공 기본 양로보험제도가 설립된 후, 서서히 공무원 이외의 모든 고용노동자로 확대 ✓2009년,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 시법사업 실시 ✓2011년, 도시 주민 기본 양로 보험 제도 실시 ✓2012년, 농민기본양로보험과 도시주민기본양로보험을 보편적으로 실시 ✓2014년, 농민과 도시 주민의 양로 보험 제도를 통합해,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 보험 제도 실시 ✓2015년, 공직원 양로금 제도를 개혁하고 기업직공과 같이 기본 양로보험 제도로 통합(공무원 연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였으나, 이전의 관리와는 다름)
	층수	✓1층: 기초연금 ✓2층: 후생연금 ✓3층: 임의 가입	✓0층(Zero pillar): 기초 연금 ✓1 층: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교 직원연금 ✓2 층: 퇴직(금) 연금(Labor code에 근거해 급여 지급,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미지급자 다수) ✓3층: 개인연금 등(임의 가입이지만 세액공제 있음) ✓4층: 주택연금, 농지연금(So far, not activated)	✓1층 (2개) : 기업 직공 기본 양로 보험 제도 ;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 보험 제도 . (각각, 1층 기초 연금 기금, 2층 개인 계좌) ✓2층 (2개): 기업연금 (2004년) 기업의 고용노동자; 직역연금 (2015년) 공무원 등 ✓3 층 (2 류) : 개인연금 (정부가 통일적인 플랫폼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희망하는 개인이 참가해, 세제우대조치, 금융기관이 사무처리) ; 그 외의 개인연금(금융기관의 연금 상품, 임의 가입)
	기금	✓연금특별회계	✓국민연금에는 없고 공무원·군인연금 등에는 있지만 복잡함	✓각급 정부재정에는 연금 특별회계가 마련되어있음 . 기업직공기본양로보험기금과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기금이 이 특별회계로 계상

2 재원	보험료	✓국민연금 : 월 16,590엔을 전액 피보험자가 부담 ✓후생연금: 표준보수 월액의 18.3%를 노사절반: 피용자 9.15%, 고용주 9.15%	✓국민연금:9%(노사 각 4.5% 부담) ✓공무원 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보험료: 18% (본인 9%, 국가 또는 사립학교 재단 9%) ✓군인연금보험료: 14%(본인7%, 국가 7%), 연간지급률(Annual Accrual rate) 1.9%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징수(2011 년 부터)	✓기업직공 기본 양로보험: 사업주가 16%, 종업원이 8%. 사업주로부터의 거출은 1층의 기초연금기금의 부분, 종업원으로부터의 거출은 2 층의 개인계좌의 부분. 개인 지급 기준은 본인의 임금이지만 지역 사회적 평균 임금의 60 %와 300 % 사이에서 결정됨. 고용주의 지불 기준은 모든 피보험자의 지불 임금의 총액임 . 이전 사업주 부담은 20%였지만 16%로 떨어짐. 앞으로도 내려갈 가능성 있음. 2014년 일원화 전 보험료 부담은 없었음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보험 :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지불 하지만 ,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피보험자는 가장 낮은 지불 구분을 선택 . 지급 기준은 연간 100원, 200원 ,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500원, 2000원의 12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지역 에서는 지불 기준 등급의 증감을 조정
	보험료 지불자	✓국민연금 : 20세 부터 전원(학생 포함) ✓후생연금: 15~69세의 고용자	✓국민연금 : 18세부터 강제가입, 단, 27 세 미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없고, 가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제외	✓기업직공 기본양로보험 :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나서 퇴직 까지 납부의무(16세부터) ✓도시 · 농촌 주민 기본 양로 보험 :16세부터 60세까지(학생 제외)
	국고 부담	✓기초연금부분의 1/2	✓기초연금은 전액 국고부담(조세), 해당 지자체의 고령 비율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차등적으로 매칭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전까지 국민연금공단 관리 운영비의 40-50%를 정부가 보조하였으나, 기초연금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공단 관리 운영비의 5 % 정도만 부담하고 있음 (정부지출은 기초연금으로)	✓정부는 기업직공 기본양로보험에 재정보조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규칙은 없고, 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역에 대한 보조이며, 경제 상황이 좋은 지역에 대한 보조는 기본적으로 없음. 2021년의 재정 보조금 총액은 6613억 200만원 ✓정부는 도시 · 농촌주민 양로보험의 기초 연금기금에 대해 재정보조를 하고 있음 . 주로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보조와 기초연금의 지급액에 대한 전액보조임 . 2021 년 국가재정보조금은 3310억 5100만원
3 운용·기금 적립 상황	수입	✓74.7 조엔(공제 등·자산 수입 제외) ✓115.8 조엔(공제 등 수입 제외·자산 수입 포함) ✓1 34.0 조엔(공제 등·자산 수입 포함) ✓(2020 년 사회보장급여비) ✓38.6조엔(보험료 수입) ✓52.5조엔(총액) ✓(공적 연금의 단년도 수지 상황)	✓보험료 수입: 53.7조원(2021년) ✓운영수익금 : 91.2조원(2021년) ✓기금 적립금 : 948.7조원(2021년 말)	✓2021년 데이터: ✓기본 양로보험 (기업 + 주민) 기금 소득 : 65793억 위안 (투자수익 제외) . 기업 직공 기본 양로 보험 : 60455억 위안 ;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 보험 : 5339억 위안 ✓기본 양로 보험 투자 수익 : 632 억 위안 ✓기업연금 투자수익 : 1242억 위안 ✓직장연금 투자수익 : 932억 위안
	지출	✓5 5.2 조엔(연금지출, 2020 년 사회보장급여비) ✓53.4조엔(급여비, 공적연금의 단년도 수지상황)	✓현금급여: 29조원(2021년) ✓관리운영비 : 0.7조원(2021년)	✓2021년 데이터: ✓기본 양로보험(기업+주민) 기금 지출 : 60197억 위안 . 그 중, 기업 직공 기본 양로 보험: 56481억 위안 ;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 보험 : 3715억 위안

	연금특별회계	✓세입: 94.6조엔 ✓세출: 91.8 조엔 ✓잉여금： 2.8조엔(2020 년도 , 특별회계 가이드북)	✓없음	✓알 수 없음
4 지급·수급	支급개시 연령	✓노령기초연금 : 65세 ✓노령후생연금: 65세. 다만 「 특별지급의 노령 후생 연금 」있음.	✓기초연금: 65세 ✓국민연금: : 2033년까지 65세로 인상 조정 중， 2022 년은 62 세，2023년부터는 63세	✓기업직공 기본양로보험: 정년퇴직연령(남성 60 세; 여자 55세(간부), 50세(일반직공))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양로 보험:남녀 모두 60세 ✓공무원 여성은 55 세인지 60 세인지 선택할 수 있음 ✓65세로 연기 논의중
	지급액	✓기초 연금: 정액. 월 6 4,816 엔(만액)×보험료 납부 월수/480. ✓후생연금 : 평균표준보수×5.481/1000×피보험자기간(월수)/12. ✓연금생활자 지원 급부금 ✓모델 가구 (남편이 40 년간 후생연금에 가입, 아내가 40 년간 전업주부)을 상정한 제도설계	✓기초연금 : :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 (2023년) ✓국민연금 :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 월감액금액, 지급률은 소득대체율 인하조정중에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기준소득 월액평균소득자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설계 법 개정 시점 기준)의 2회에 걸친 제도 개혁으로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 매년 0.5%p 감소)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데다 이론적인 소득 대체율(40년 가입으로 2023년 시점에서 42.5%)과 실질 가입 기간을 반영하는 소득 대체율(평균 실질 소득 대체율 22.4%, 2020년 시점)의 괴리가 크다. 주로 사회복지학자를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상의 적절성(Adequacy of pension benefit)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급여 적절성보다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더 강조하고 있음	✓기업 직공 기본 양로 보험 : 급부 계산은, 「노인(구 제도)」 「신인(신 제도)」 「중인(신구 제도 겸한다)」의 3 종류로 나누어 급부 내용을 결정 ✓노인: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년 퇴직한 자; 기본적으로 구 제도의 규정으로 지급 ✓신인 : 1998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 ; 기초 연금＋개인 계좌 연금 , 기초 연금= (전년도의 해당 지역의 평균 임금 ＋개인별 지수화 평균 임금) ／2×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 1% ; 개인 계좌 연금 = 개인 저축액 / 소정의 지불 월수 ✓중인:1997년12월31일 전에 가입하여 1998년 1월 1일 이후 정년 퇴직한 자; 기초 연금 + 개인 계좌 적립 + 경과 연금. 기초연금=(전년도 당해 지역의 평균 임금 +개인별 지수화 평균 임금)/2×실제 보험료납부 기간 + 미납납부기간) ×1% ; 개인계좌연금 =개인저축액/ 소정 지불 수 ;경과 행연금=개인별 지수화 평균 임금 × 이행계수×미리 납부기간 ✓개인별 지수화 평균 임금 = (정년 퇴직시) 전년도 당해 지역의 평균 임금 × 평균 납부 지수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 보험: 기초 연금＋개인 계좌 연금 , 기초 연금은 해당 지역의 소정 금액 ; 개인 계좌 연금 =개인 저축액/소정 의 지불 월수 ✓개인 단위, 기준 모델 없음 ✓정부는 기업직공 기본양로보험의 기초연금을 2005년부터 연속 조정(증액)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1년에는 2020년 보다 4.5% 증가. 조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임금 상승률,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만 , 명확한 규칙은 없는 것 같음(공개하지 않음) ✓정부는 도시 · 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의 기초연금 도 조정(증액)하고 있지만, 조정의 시기나 이마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음

	평균수급액	✓기초연금 : 56만엔(연금제도 기초자료집) ✓후생연금 : 14.6만엔(기초연금 부분 포함, 연금제도 기초자료집) ✓1 6.6 만엔/월(고령자 세대의 공적 연금·은급 소득 금액, 2018 년 , 국민생활 기초 조사)	✓기초연금 : 월 323,180원(2023년) ✓국민연금: 노령연금(월 55만7천원); 장애연금(월 46만2천원); 유족연금(월 30만3천원)(2021년)	✓기업 직공 기본 양로 보험 3577.37 위안/월 ,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 보험 190.95위안/월 (2021 년)
	수급자비율	✓94.3% (65세 이상에 대한 비율, 2019년 , 국민생활기초조사)	✓47.62%(6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장애, 유족 연금 수급자의 비율)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 제도 도입 시기가 늦다 보니(1999년 4월 모든 국민에게 제도 도입), 아직까지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낮다. 앞으로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수급자 비율 = 수급자 수 / (수급자 수 + 재직자 수) - 기본 양로보험 수급자 비율 28.55% 그 중 기업 직공 기본 양로 보험 27.37% -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 보험 29.59% ✓60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수급자의 비율은110% (직공기본양노보험제도에서는 여성이 50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남성의 조기 퇴직자도 있으므로 수급율이 100%를 넘음. 현재 중국의 고령자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연금액이 매우 작음)
5 연금일원화	개요	✓피용자 연금(일반 피용자, 선원·국가 공무원 · 공공 기업체 직원 · 지방 공무원·사립 학교 교직원·농림 어업 단체 직원)이 2015년도부터 통합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연금 (국방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이 각각 운영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논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음.	✓1990년대초부터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모든 지방과 업종에서 연금적립 시범사업을 실시함 ✓1997년에 각종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직공 기본양로보험 제도가 창설되었지만 당시에는 은행이나 철도 등 업종 내 통합이 인정됨. 1998년 이후는 모두 업종이 아니고, 지역(성)내의 관리와 통합을 실시. ✓2014년 농민과 도시주민의 양로보험제도를 통합하여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가 됨(기업 직공 기본양로보험과 같은 기본연금제도이지만, 자금은 별도(계정) 관리가 되고 있음) ✓2015년의 공무원(국가기관 및 공적기관 직원)의 연금제도개혁에 따라 기업과 같은 기초연급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금은 이전과 같이 분별 관리되고 있음
6 유족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 사망한 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던 아이가 있는 배우자, 아이 [1] ✓후생연금 : 사망한 자에게 생계를 유지되고 있던 유족 중,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사람(아내·아이·남편·부모·손·조부모의 순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아이, 부모, 손자, 조부모	✓기업직공 기본양로보험에는 장제비 보조금과 일시금이 있음. 장제비 보조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전년의 해당 지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월액)의 2배. 일시금 금액은 개인의 납부기간과 해당 지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과 연동 ✓도시 · 농촌 주민 기본 양로 보험에는 장제비 보조금과 일시금이 있지만 그 기준은 비교적 낮고 지역에 따라 다름
	수급기간	✓기초연금: 아이는 18세가 된 연도의 3월 31일까지 ✓후생연금 : 자손은 18세가 된 연도의 3월 31일까지	✓어린이: 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등급 이상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등급 이상 ✓손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등급 이상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등급 이상	✓없음

	연금액	✓기초연금: 아이가 있는 배우자가 받을 때 = 연 777,800엔 + 아이의 가산액 ✓아이가 받을 때 (다음 금액을 아이의 수로 나눈 금액이 1인당 액수) = 연 777,800엔 + 2명째 이후의 아이의 가산액 ✓후생연금: 사망한 자의 노령후생연금 보상비례부분의 4분의 3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 연금액 60% + 부양 가족 연금액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 연금액 50% + 부양 가족 연금액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 40% + 부양 가족 연금액	✓없음
7 지속가능성	미래 추정	✓재정 검증	✓재정 계산	✓정부는 양로보험기금(특히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수지 균형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어 관계자나 전문가에 의한 예측이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개한 견해(룰)나 기성의 성숙한 방법은 없음
	임금 및 이자율수준	✓최근의 수준은 내각부 시산에 준거. ✓그 후는 사회 보장 심의회 (연금재정에 있어서의 경제 전제에 관한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한 값을 기초로 설정 ✓케이스 Ⅰ~케이스 ⅤⅠ에서 임금상승률이 0.1~2.0%, 운용 수익률은 실질 0.8~3.3%, 스프레드 0.1~1.9%.	✓제4차 재정계산시 임금상승률은 2.1~1.6% ✓기금투자수익률: 4.3~4.9%	✓기업직공 기본양로 보험의 개인계좌의 기장 이율은 2021년 6.69%로 되어 있지만, 도시·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의 개인계좌의 기장 이율은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높음
	조정 방법 원칙	✓보험료 고정 방식 · 거시 경제 슬라이드	✓없음(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근거하여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음.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만 점검하였을 뿐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음. 2023년 4월 현재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2023년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단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	✓정부는 양로보험기금(특히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증액)하고 있지만 조정을 위해 공개한 규칙이나 기성의 성숙한 방법은 없음
	연금 수령 연령 이동	✓앞으로 올리기 / 내리기 시스템(조기 지급 및 지연 지급) ✓희망하면 60세부터 65세가 되는 사이에 앞으로 올려 수급 가능. 다만 평생에 걸쳐 감액[2]. ✓65세로 받지 않고 66세 이후 75세까지의 사이에서 내려 수급 가능. 평생 동안 증가[3].	✓수급 연령 65세 인상 중 2033년에 종료	✓조기 지급 및 지연 지급 제도 없음
8 비고용자 대응	주부	✓제3호 피보험자 제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전업주부나 비정규노동자는 기업직공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해도 좋고,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해도 좋음. 제3호 피보험자와 같은 존재는 없음(개인단위의 가입과 급여이기 때문에).
	비정규	✓국민연금.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후생 연금	✓국민연금의 가입 자격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등)로 구분됨	✓상동

	농업·자영업	✓국민연금	✓국민연금지역 가입자	✓자영업자는 동일 ✓농업 종사자는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 보험에 가입
9 사적연금/민간보험	적용	✓3층 부분	✓3층 부분	✓2022년 부터 정부는 특별 개인연금을 시작 ✓또한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가입 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공적 우대책	✓소득공제	✓세액공제(국민연금은 소득공제)	✓2022년부터 특별 개인연금은 매년 과세소득에서 12,000 위안이 공제되므로 개인연금 가입자는 연간 최대 5,400위안의 면세를 받을 수 있음
	생명 보험	✓민간생명보험회사가 개인연금보험 제공 ✓생명보험료도 소득 공제 가능	✓민간생명보험사와 증권회사 등이 개인연금 제공	✓민간 생명 보험사의 개인 연금이기 때문에 우대 조치가 없음
10 기금 운영	실시 주체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GPIF , 2006 년 설립)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NPSIM , 1999 년 설립)	✓전국 사회보장기금이사회 (2000년 설립) : 재무성이 운영하는 공적기관이며, 사회보장기금의 투자·운용기관으로서 주로 재정자금 , 국유자본배부 , 수탁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몇몇 성은 기초연금보험기금의 투자와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
	운영자산액	✓196 조 5,926 억엔(2021 년 업무개황서)	✓948.7조원(2021년 말 기준)	✓총자산 : 1 조 6898.52억 위안. 그 중 부채 총액 : 2293억 7900만 위안, 자본 총액 : 1조 4604억 7300만 위안
	자산 구성	✓기본적으로 국내주식 / 국내채권 / 외국주식/외국채권이 25% 씩(2021 년 업무개황서)	✓국내주식 : 17.5% ✓해외주식 : 27.0% ✓국내 채권: 35.8% ✓해외채권: 6.7% ✓국내 대체: 2.6% ✓해외 대체: 9.9% ✓단기 자금: 0.3% (2021년 말 기준)	✓직접투자 : 이사회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은행예금과 주식투자가 중심이지만 38.17% . ✓수탁투자 : 이사회가 수탁한 투자운용회사의 관리·운영은 주로 국내주식 , 채권 , 연금상품 , 상장증권투자펀드 , 주가지수선물 , 국채선물 등 61.83%.
	수익 금액	✓10 조 925 억엔 (2021 년 업무개황서)	✓530.8조원(2021년 말 누적)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누적 투자 수익: 2619억 7,700만 위안,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 6.49%. ✓2021년 투자수익 은 631.8억 위안, 투자 수익률은 4.88%.
	국고납부액 [4]	✓국민연금계정 : 2,500 억엔(2021 년 업무개황서) ✓후생연금계정 : 7,500 억엔(2021 년 업무개황서)	✓2022년 기초연금 예산 약 20조원	✓조사 중

11 기타 사항	사회 보장 협정	✓2 3 개국과 협정을 서명한 중 2 2 개국에서 발효 완료(일본연금기구)	✓협정 발효 38개국 ✓서명국 4개국	✓스위스, 일본, 룩셈부르크,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 독일, 스페인, 핀란드, 덴마크, 세르비아, 프랑스를 포함한 12 개국 과 협정 을 서명 , 발효
	I CT 활용	✓마이 넘버에 의한 연금 기록 조회 ✓기초연금번호와 마이넘버의 연결	✓국민연금의 '내 연금'으로 기록 조회 가능	✓개인은 사회 보장 카드 있다. 수익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지급 보장	✓	✓현재 공무원 · 군인연금은 지급보장되고 있다 (지급보장이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함으로써, 급여 삭감없이 연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하는 조항임.) ✓최근 국민 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적자 발생시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하자는 요구들(일부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이 있음	✓
	생활보호·국민기초보장과의 관계	✓연금을 받고 있어도, 최저 생활비(연령, 세대 인원수, 장애의 유무, 모자 세대 유무 등에 의하지만, 1.3만엔 전후) 에 못 미치면,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Absolute poverty line)는 2022년 시점 월 58.6만원)의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그에 상응하는 생계급여액을 환불하게 됨(소위 , 「줬다가 기초 연금」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배경)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극빈층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시 비슷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삭감	✓
	연금제도간 조정	✓기초 연금 계정을 통한 조정 ✓국민연금 (국민연금계정) 및 후생연금의 각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초연금계정에 기초연금거출금을 거출 ✓기초연금급부 (신법) 는 기초연금계정에서 수급자에게 지급. ✓기초 연금 상당 급부 (구법)에는 기초 연금 교부금을 통해 국민 연금(국민 연금 계정) 및 후생 연금의 각 실시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게 지급	✓국민연금의 2022년 시점의 Annual accrual rate 는 1.075%, 2028년에 1% 로 하향 조정 예정 ✓공무원연금과 사립교직연금의 2022년 시점의 Annual accrual rate 는 2016년 1.878%, 2020년 1.79%, 2025년 1.74%, 2030년 1.72%, 2035년 1.7% 로 하향 조정 예정 ✓군인연금 연간 Annual accrual rate 1.9% ✓민간퇴직금 (1 0 0 % 기준) 대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퇴직수당) 은 재직기간별로 민간에 비해 최대 39%를 더 지급(민간 대비 최대 39/100)	✓

참고)

1. 아이는 18세가 된 연도의 3월 31일까지,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애 연금의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의 상태의 경우.

2 . 감액율(최대 24%) = 0.4% × 앞서 청구월부터 65세에 이르는 날의 전월까지의 월수.

3. 증액율(최대 84%) = 0.7% × 65세에 달한 달부터 되풀이 신청월의 전월까지의 월수.

4. 후생연금보험사업 및 국민연금사업의 운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연금급여의 원자로서 운용수익의 일부를 연금특별회계에 납부. (https://www.gpif.go.jp/gpif/faq/faq_02.html)